

제439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정기회)

제 2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9월15일(화)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인사청문회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7)

상정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인사청문요청안 1
2.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인사청문회 1
- 의사일정 상정의 건 48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7)
..... 48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인사청문요청안 50
2.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인사청문회 50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성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후 속개 시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을 출석시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 등 형사사법체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 1건을 처리한 다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산회 시까지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됨을 안내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인사청문회

(10시04분)

○위원장 김성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인사청문

회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한민국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는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민생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실감하는 어려움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키워 내야 하는 과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막중한 책무를 고려하여 공직후보자가 해당 분야에 충분한 전문성과 정책적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아울러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국민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제도 취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의 중대성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고 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에 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증인·참고인 신청이 없었던 관계로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 절차 없이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는 대로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겠습니다. 이후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의 작성과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서 채택 시에 의결한 것과 같이 위원장님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소영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가 끝나면 직접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공직후보자 이소영

○위원장 김성원 다음으로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소영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써 직무 수행을 위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고견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중소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11만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고금리·고물가의 압박, 누적된 금융채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유통구조의 충격, 소비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 전환까지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은 생존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당장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서 시대의 흐름 속에 그분들이 뒤처지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장관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방향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혁명은 IT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의 산업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모바일 혁명은 우리의 일상과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었고 세계가 필요로 하는 대체 불가능한 산업경쟁력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AI 혁명이 우리를 또 한번 거대한 시험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과감한 규제 합리화 그리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막아 세우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이 환영받는 사회라야 새로운 것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겠습니다. 타 부처의 규제를 푸는 일을 남의 일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로 여기며 필요하다면 타 부처 장관들을 직접 설득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상장시장은 중소기업이 성장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이자 벤처기업의 회수 시장입니다. 그야말로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는 혈관이 바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코스닥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금융위원회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둘째,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찾아내고 AI 전환과 탄소 대응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국가 대도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세 가지 성장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더 구체화하고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시드(seed) 그리고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이 소수 대기업 종사자만을 위한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성장의 온기와 열기가 중소벤처기업에까지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산업 전략과 함께 기업 전략이 수립되

어야 합니다.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퍼지컬AI 분야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이들이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과 특례는 무엇인지, 7대 시드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미래 첨단기술을 어떻게 중소벤처기업에게 전달되게 할 것인지, 5극 3특 전략에 있어서도 앵커 대기업 외에 각 지역별·분야별로 어떤 중소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구체화되고 국가 전략에 녹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탄소국경 조정, 공급망 실사제도와 같은 코앞에 닥친 글로벌 탄소규제와 ESG 공시 확대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미리 대비하고 자신감 있게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정비와 함께 탄소 감축설비 전환 그리고 R&D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면한 지속 불가능한 비용구조를 개혁해서 버티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활짝 웃는 소상공인을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가장 넓은 뿌리입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도 무너집니다. 지원금으로 잠시 버티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사하면 그만큼 남고 노력하면 성장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물가에 더해 임대료와 이자비용,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각종 비용 부담이 누적되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비용구조 아래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체계적으로 지표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시행해 온 정책의 효과도 면밀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정책에 있어서도 실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쟁력과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아프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건강돌봄 비용 지원과 산재보험·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에 대응하는 정책과 재도전을 위한 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늘 질문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사회인가 아니면 배척하는 사회인가, 혁신 수용적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는 자영업의 구조적인 환경을 그대로 둔 채로 소상공인에게 더 노력하고 더 혁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연 공정한가.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실천으로 또 변화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아낌없는 조언과 지적 모두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중 실장 왼쪽이 조경원 창업정책국장이네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관 조경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자세 좀 똑바로 해 주실래요?

인사청문회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벌써부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의 경우 7분, 보충질의의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질의를 진행하도록……

○최수진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김성원 최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 저 자료 요청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쟁점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만 할 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특히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과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 시점에 관한 문제 자료 내 주시고요. 배우자 본인의 김앤장 이해충돌에 관련된 질의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 내 주십시오.

전력시장감시위원회, 기후솔루션 동시에 겸직했었을 때 그때의 상황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 주십시오. 그래서 이해충돌 의혹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 국회 입성 이후 지역 광역·기초 출마자들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 받은 내역과 실제로 당선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제출하겠다’라며 서면답변서에 했지만 별도로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 요청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모 컨설팅 업체에 2023년부터 매달 330만 원부터 1100만 원을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해서 총 7000만 원 정치자금 지출했습니다. 해당 컨설팅 건이 몇 건이고 내역과 구체적인 자료내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 2023년 6월 26일 정치자금 내역에서 형사사건 위임 착수금 33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 형사사건의 번호와 피고소·고발 내용, 정치활동과의 연관성 관련된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적십자회비 3만 원을 정기적으로 현재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재임 중 상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걸로 알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오전 질의가 끝나기까지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방금 최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보자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용역비 7000만 원을 지급한 컨설팅 업체가 가 보니 공실 업체였다는 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 중에 단 한 건도 의원실로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회에서 많은 의정활동을 의원님들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보좌직원이 8명이나 되고 보좌직원들이야말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컨설팅하는 직원들인데도 아주 특수사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7000만 원의 컨설팅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및 용역비 산정 근거, 그다음에 용역 결과물 원본, 실제 용역 수행을 입증할 만한 업무지시와 결과 보고 내역, 용역비 지급 및 회계처리 자료를 오늘 오전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실에서 요청한,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요구한 40여 건의 자료에 대해서도 단 한 건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후보자님, 특별하게 문제 있는 자료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자료 제출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뒤에 김우중 실장님 잘 챙겨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김우중 예.

○위원장 김성원 이제 주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진 위원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장관후보자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본인께서 9900만 원 정도를 상환해서 보냈고 남편분께서 2억 한 2000만 원을 대여 형태로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맞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남편분이 대여해 준 금액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원금이 아니라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맞습니다. 2억 2000만 원의 연간이자 4.6%를 통상 계산하면 한 1026만 원으로 비과세 기준선인 연 1000만 원을 초과합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맞습니다.

○최수진 위원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상속증여세법 46조에 따라 주거비, 생계비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수진 위원 2억을 한 번에 주는 게 생계비라고 어느 누가 그렇게 일반 통식적인 국민의 관점에서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2억을 한 번에 준 게 아니고요. 임대인 측에 직접 배우자가 송금한 내역입니다. 전체……

○최수진 위원 어쨌든 2억이 한 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송금을 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모친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수진 위원 증여는 아니지만 생활비도 아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지금 제가 그걸 지적을 하고 했더니 9월 8일 언론 대응에 나가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를 했다 했는데 실제로 납부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지난 금요일에 납부했고 세액이 한 100만 원 정도이고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165만 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최수진 위원 100만 원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힘든 시간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후보자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위원님 지적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이 비실거주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비거주……

○최수진 위원 비거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최수진 위원 그러면 실제로 2016년에 홍제동 아파트를 4억 9000만 원에 매입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맞습니다. 2016년입니다.

○최수진 위원 그리고 이사를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2020년……

○최수진 위원 이사하게 된 이유는 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2020년 2월에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거주하신 거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맞습니다.

○최수진 위원 4년 거주하고 했다. 그러면 약 7년 동안 비실거주가 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맞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그때 처음에 4억 9000에 샀고 지금 현재 거래액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 9억 9000만 원, 시세차익 약 5억 원 정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런데 아직 매매를 하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현된 사실은 없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자가가 아닌 다른 데서 살고 있고 남한테 세를 주는 비실거주입니다. 그랬을 때 언론에서 ‘갭투자’ 이렇게 언론이 나왔어요. 실제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참 억울하셨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갭투자의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수진 위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하시지요? 비거주 1주택자를 돈의 마귀라고 몰아넣으신 것, 그거 언론에서, SNS에서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저는 이 부분을 다주택자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했습니다.

○최수진 위원 앞뒤 맥락을 다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그래서 집을 팔아야 된다 해서 파셨고, 안 그렇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집을 판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가 자가를 갖고 있어서 꼭 거기에 살 수 있는 국민이 실제로 그게 싫어서 떠나고 갭투자를 위해서 저는 떠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명히 억울한 게 있습니다. 교육이 됐든 실제로 어떤 직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매기고 비실거주자들을 마귀로 모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소신껏 저는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일단 먼저 정부의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한 직접 규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최수진 위원 차등화 자체가 차별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지역 안 돌아다니십니까? 저희 지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1가구 1주택 그것 갖고 외치던 정부가 갑자기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문성, 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대 산중위에 계셨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최수진 위원 그때 실제로 대표발의 건이 평균보다, 21대 국회 발의 건이 평균이 78건, 다음 보실래요? 51건 하고, 22대는 지금 평균인 약 54건에서 3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표발의 수가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소상공인법이나 중소기업기본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핵심 법률과 관련된 입법이 전무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위원님, 저는 평소에도 여러 차례 이런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꼭 입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평소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 한번 보실래요?

‘규제개혁부장관이 되겠다’ 해서 ‘제2의 타다 사태 막는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적으로 좋은 법안을 내는 것,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안들을 보면 산업이나 중소기업 육성법을 내신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에서 세척 공정에 쓰는 NF3를 온실가스로 법정화했습니다.

그러면 산업부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것 아니냐’, 국회 보고서에 이 얘기 있습니다. 미국·일본·대만 등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규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도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반도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게 IPCC에서 온실가스로 다루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향후에 국제 탄소 통상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증하고 측정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감사합니다.

다음, 이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주 위원 후보자님, 아까 소신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부의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에도 그것이 다 같이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큼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에 벤처·스타트업에 대해서 주로 국내에서의 창업 그리고 성장 그 후에, 그다음에 해외 진출을 별도 지원하는 그런 구조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아까 소견을 말씀하시면서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해외 진출과 관련된 것들도 정책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비즈니스가 어차피 처음부터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제로 해야 경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온라인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제로 해서 모든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되어야 나중에 가서 이중, 삼중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을 좋은 기업을 국내 시장 안에서 키웠다가 나중에 또 글로벌 시장을 전제로 해서 다시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영토를 넓혀 가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의 이 시대의 중기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중기부의 벤처·스타트업 정책을 국내 창업 지원 이후에 사후에 해외 진출 지원 이런 분절된 구조에서 벗어나서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시장을 전제로 한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를 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위원님.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과 같습니다.

○이연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산업부 같은 경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부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이 점에서 적극적으로 전환을 취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이언주 위원 아무래도 그전에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산업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기업이 해외 진출 단계에 들어설 때 별도의 사업마다 다시 신청 또 심사 절차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창업부터 스케일업, 수출, 현지 진출까지 기업의 성장 이런 것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연속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위원님.

○이언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비슷한 취지입니다만 현장에서 생산, 합작, 공급망 편입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중소기업의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갈등과 그다음에 어떤 착취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대기업들도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사실은 자국중심주의의 이런 어떤 세계질서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수직 계열화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로 이미 세계화가 끝났기 때문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국가의 산업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핵심 전략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것을 조금씩 하고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K-수출전략품목 육성 이런 것들을 좀 하고는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팝업스토어라든지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불필요한 것들이, 예를 들면 해외 거점에서 단순 사무공간 지원 위주로 좀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금융, 투자, 법률, 인증, 현지 채용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거점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업체의 해외 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예산으로 진출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들이 주로 있었는데 사실은 해외 전시회에 여러 번 참석하는 것보다 대기업이 먼저 길을 열고 대기업과 동반하고 협력해서 함께 진출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십여 년 전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 동반 해외 진출 그런 프로젝트와 사업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거점 그리고 원스톱 지원 그리고 동반 진출 이런 것들이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금융 그다음에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금 융자 문제지요, 파이

낸싱 문제. 그리고 법률 지원 문제 또 인증을 어떻게 받을 거냐 이런 것들, 또 현지에서 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 이민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자 문제?

이런 게 사실은 대기업은 인프라들이 굉장히 풍부하지만 중소기업은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지원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기부가 그 점에서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은 지금 보면 관광객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K-중소기업 제품의 유통·판매 인프라 확대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팝업스토어를 좀 확대하고 공동판매관이라든가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브랜드의 임대료, 매장 구성 등을 지원을 한다든가 사업 면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또 다국어 환급 시스템이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말기 지원 또 글로벌 간편결제 인프라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그 관련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해외 현지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아직까지는 KOTRA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거기에 있어서 해외 거점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준비되고 있는 K-중기마루라고 하는 해외 거점들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이연주 위원 협력해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그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연주 위원 뒤에 말씀드린 것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뒤에 팝업스토어나 그런 다국어 지원, 매장 등록 지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가급적 후보자님도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봉 위원 먼저 제7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감사합니다.

○송재봉 위원 후보자가 지명되고 나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환영 논평을 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봤습니다.

○송재봉 위원 ‘지난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 희망회복자금 확대 또 신속 지원을 강조해서 대책을 마련했었고, 또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제도의 현실화를 촉구해 오고 또 개선안을 마련했던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문제에 더 관심 가져 주실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대 때 제가 산자증기위 활동을 할 때 코로나의 영향이 너무 커서 버팀목자금 추경 편성을 위한 예결위 예산소위의 산중위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더 관심 많이 가지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사실 우리 사회에 지금 배달앱 독과점 문제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높은 수수료 또 광고비, 배달비 이 부담을 소상공인들이 다 짊어지고 있다 보니까 음식점의 거래액이 41조 6000억 정도가 될 정도로 시장은 굉장히 커지는데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태는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고.

최근에 쿠팡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하려고 한 걸 막아서 오히려 조사를 못 하게 할 정도로 법 위에 지금 군림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그래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 방법이다.

하나는 지금 우리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온플법 같이 해서 적극적인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일 테고,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관심 가져 왔던 상생배달앱 제도 등을 통해서 오히려 시장 자체를 좀 교정해 나갈 힘을 상생배달앱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말씀하신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요. 쿠팡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수수료라거나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플법이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기부 법안 심사를 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민간 플랫폼을 규제하고 여러 가지 정보 공개를 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일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공공 배달앱이라고 하는 것을 매력 있는, 경쟁력 있는 앱으로 키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올해 중기부 예산안에 1200억 원이 넘는 공공 배달앱 육성 예산이 담겨 있는데 그 예산을 단순히 쿠폰을 나누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저도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상생배달앱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쿠폰을 현재 1200억 정도, 대부분이 아마 쿠폰을 지급하는 예산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송재봉 위원 그래서 배달 시스템에 대한, 상생배달앱 시스템을 좀 더 소비자의 취향

에 맞게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배달 시스템을 좀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실제 소비자들이 배달을 하면, 주문하면 즉시즉시 다른 플랫폼보다 오히려 더 서비스가 나으면서도 배달노동자들에게도 일정한 시스템의 효과가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재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그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도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관련 예산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배달비 지원 예산은 중기부가 주장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국회의 예산심사 단계에서 논의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봉 위원 함께 노력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태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또 하나 우리 정부가 정말 야심차게 진행하고 또 추진하는 것이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송재봉 위원 저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창업이 성공하고 성과를 내려면 저는 기술창업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각종 R&D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업화로 연결되는 비중이 매우 낮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어요. 한 20% 내외밖에 안 된다 이렇게도 지적을 해 오고.

그래서 사업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기부가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부터 R&D 예산도 돈이 되는 R&D라는 큰 기치하에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R&D 과제를 사전적으로 선별하고, 그렇게 선별된 과제에만 R&D를 주는 그런 예산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예,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기술정보가 중기부에 상당히 축적돼 있기는 한데 그 외에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10개 부처에 여러 가지 기술, R&D 관련된 기술정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술정보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만듦으로 해서 기술을 개발한 쪽이나 또는 기술 수요가 필요한 기업이나 접근이 좀 용이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기술거래를 좀 더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중국 상하이 기술거래소 같은 그런 기술거래소를 새롭게 우리가 창업을 해서 오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기술거래소가 2000년에 만들어졌다가 잘 운영되지 않아서 사라진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중기부와 지재처가 각각의 기술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스마트테크브릿지

라고 하는 페이지고 지재처는 IP마켓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통합하고 기술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재준 위원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원래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로 인재 영입이 되셨더라고요. 실제로 이력서를 보내 주신 것 보면 여러 가지 기후·환경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맞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런데 환경이라는 게 산업에 있어서는 규제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 입장에서는 ‘혹시 새로 오시는 중기벤처장관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하고 부담을 주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존에 후보자께서 했던 발언들 관련해서 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DC 관련해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NDC,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잖아요. 이거 2035년까지 우리나라가 53~61%까지 감축하겠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잖아요.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우재준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후보자께서 있는 민주당 기후행동 의원 모임 ‘비상’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61%보다 더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셨는데 사실은 NDC 감축이라는 게 그 나라에서 자율적으로 세우는 목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부담을 이렇게 많이 가지면서도, 배출 감소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면서도 굳이 우리가 이렇게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50년까지 국가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되어 있고 실제 여러 정부를 이어서 그 목표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빨리 줄이고 나중에 조금 그 부담을 더느냐, 지금 천천히 줄이고 나중에 그 부담을 더 심하게 지느냐, 이 세대 간의 형평의 문제가 거기에 결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 바라봐야 될 대상이 지금 살고 있는 국민과 중소기업이기도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활동할 국민과 중소기업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나중에 미루기보다는 지금부터 일정한 비율로 감축을 해 나가는 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온실가스는 세대 간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지구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좀 내려가는 거지요. 우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NDC를 탈퇴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최고 점 대비 7~10% 감축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굳이 더 많은 부담을 지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빨리 줄이자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우리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아무도 안

하면 정말로 해결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수십 년간 진행되는……

○**우재준 위원** 그런데 장관께서는 지구 편을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편을 조금 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글로벌 흐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우재준 위원** 글로벌 흐름이 지금 미국은 탈퇴했고 중국은 조금 하고, 어떻게든 자기 나라에서는 조금씩 이것저것 명분을 만들어서 그래도 적게 부담하려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는 굳이 더 많은 목표를 이렇게 세워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53~61로 발표하긴 했지만 규제와 연동되는 목표는 거기에서 하한치인 53%를 규제하고 연동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이때 모임에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OECD 배출량 6위에 해당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부담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우리 6위지만 몇 % 정도 배출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1.6%.

○**우재준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1, 2등이 워낙 많이 배출해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출하는 양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크지 않습니다. 사실 1, 2등이 거의 배출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자기들이 어떻게든 명분을 어떻게든 찾아서 약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굳이 먼저, 1.5%밖에 차지하지 않는 나라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좀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답변드려도 될까요?

○**우재준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배출에 대한 책임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AI 전환이 시대적인 흐름인 것처럼 기후 대응도 시대적인 흐름이고, 사실은 최근 몇 년간의 작은 부침이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수십 년간 기후 대응이 강화되는 쪽으로 글로벌 흐름이 바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상전략 그리고 산업전략의 측면에서, 예컨대 내연기관차 산업을 위해서 전기차 전환을 미루다가 독일차가, 그 유명한 수입 브랜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러한 거대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서 선제적인 산업전략으로서 기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중기중앙회나 이런 중소기업계에서는 이 부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실태조사 보고서도 냈고 여러 가지 성명도 내고 있고, 이런 부분은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알고 있고 며칠 전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때 저에게 건의사항, 제안사항으로 전달해 주신 게 일곱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두 번째가 실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이나 28년부터 시작되는 공급망 실사제도 같

은 것들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전혀 모르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측정이나 검증·보고 체계도 제각기 달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를 전문성을 가지고 정비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중기벤처부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들 이런 것들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저희가 자료 회신을 요구하니까, 혹시 얼마 있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이야기 들으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보고를 받았고……

○**우재준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기벤처 예산이 150억이에요, 1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굉장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 로드맵이 있는지 달라고 하니까 없대요. 산업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없대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상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지요. 나중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있는데 현장에 맞는 적절한 속도라는 걸 저는 충분히, 이제는 왜냐하면 중기부장관후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제관계나 이런 것들도 보고 그래도 우리 편도 들어주고 우리 기업들 편도 들어주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시고 혹시나 우리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으면 약간 천천히 가도록 설득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조화롭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제가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도 사실 여쭙보고 싶은데 과거에는 원전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지금은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저는 일단 소위 탈원전주의자라고 분류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과거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면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장 부지조차도 선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화장실이 없는 상태에 계속 원전을 돌리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안전성이나 경제성도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은 재생에너지다 아마 그런 발언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이소영 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평소 또 청년 벤처 지원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소영 후보자님 외갓집이 남원에 있는 주천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지역구로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포부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남원에 대해서 더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플래카드도 제가 걸겠습니다.

후보자님, 개별 정책을 여쭙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 청문회가 끝나면 한 달 뒤에 국정감사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전임 장관과 중기부는 우리 위원회에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기술탈취 대응 제도의 정비, 지방 벤처생태계 대책,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도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런 약속이 초기화되고 국감 때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일을 우리는 많이 봐 왔습니다. 국회에 대한 약속은 장관 개인이 아니라 부처가 한 약속입니다. 전임 장관이 우리 위원회에 약속한 사항을 전수 점검해서 취임 후 1개월 안에 이행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장관이 국회에 와서 한 발언은 개인적 발언이 아니라 부처를 대표해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약속된 것들을 정리해서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국감 전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모두의 창업 1차 신청자의 비수도권 비중이 53.4%였습니다. 기회의 문을 열면 지역의 절반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존 지원 사업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아기유니콘 선정 기업의 81%가 수도권이고 산업통상부 공모사업 분석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은 전수 대비 예산 비중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지역에 도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선정 구조가 수도권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작년 국감에서 전임 장관도 지역 집중 투자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중기부 창업 벤처 지원 사업 전체의 지역별 신청 예산 배분을 전수분석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선정 평가의 균형발전 성장 지표를 반영하고 산업 기반 취약 지역 별도 트랙을 신설하는 데 동의하시는지요? 비수도권 스타트업 파크 등 기존 지역 인프라의 예산 안정성 확보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지금 벤처창업과 관련해서는 VC의 90%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고 대규모 창업 인프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어서 굉장히 편중이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정부도 인식하여서 칩스 신규 과제 지정에 있어서 운영사가 서울에 있는 운영사라 하더라도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선정과 지원을 내년부터 50% 이상 하도록 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도권이 소외되거나 또 수도권에 쏠리지 않게 다각적인 정책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승 위원 그리고 기술탈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2018년 12월에 도입됐는데 8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시정 권고나 조정 성립으로 이어진 것은 17건입니다. 1년에 2건꼴입니다.

둘째, 기술분쟁 조정신청 255건 중 성립은 59건, 넷 중 하나입니다.

셋째가 가장 심각합니다.

피해액과 구제액을 물었더니 중기부의 답이 자료 미보유였습니다. 기술탈취로 중소기업이 얼마를 잃었고 얼마를 되찾았는지 주무부처가 측정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가 시행됐고 범부처 신문고도 열렸습니다. 신문고는 한 달 만에 종전 연간 신고량인 20건이 접수돼 4개월 만에 49건입니다. 제도의 문이 열리니 숨어 있던 피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과를 접수 건수로 세면서 피해 회복은 측정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들도 17건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확답을 문의합니다.

첫째, 기술탈취 대응의 성과지표를 접수 건수가 아니라 피해 회복 실적, 회복된 금액과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 측정체계를 만들겠습니까?

둘째, 증거수집 제도의 신청일, 실적과 비밀유지권 하위규정, 표준가이드 완성 일정을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기술탈취에 대한 어떤 정책의 성과를 접수 건수가 아니라 회복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가 이제 법은 통과되고 28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하위규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준비 일정을 국정감사 보고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리고 아까 이언주 위원님 말씀에도, 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미국이라든지 해외에 수출할 때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인가요? 거기가 미국 소상공인협회에 사무실을 내 가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판로를 개척할 때 그쪽의 바이어들을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도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 상공회의소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포들이 상공인협회에서 많은 바이어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해외에 수출할 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중기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그리고 예산 지원도 좀 해 주셨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교포분들을 해외 진출의 연결고리로 삼는 사업이나 예산 지원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부분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한홍 위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감사합니다.

○윤한홍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기후솔루션 사단법인, 잘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윤한홍 위원 거기 설립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윤한홍 위원 공동설립자로 돼 있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맞습니다.

○윤한홍 위원 공동설립자인데, 기후솔루션이 성장한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성장했어요. 2017년에 기부금 180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기부금이 178억입니다. 8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소영 후보님의 빛나는 활약이 곳곳에 배어 있어요, 여기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정부의 각종 환경 관련 위원이었어요. 그 시절이 아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에 엄청난 국가보조금이 나가던 시기였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는데 그 과정에 보니까 해외 환경단체가 많은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하는데 그 과정 과정에 후보님의 역할이 있었다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덴마크 KR Foundation이 그 돈을 지원을 하지요. 2020년 4월에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20년 5월 달에 5억 원을 2년간 후원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맺었고 그다음에 7월 달에 그거 하고 나니까 이소영 후보자가 기후솔루션과 함께 탈석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7월 28일 날은 무역보험공사에서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를 금지하는 무역보험법을 대표발의합니다. 이게 기후솔루션의 청탁 입법이에요. 그래서 20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을 중단해라, 무역보험공사에다 국감에서 압박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하청 국감이지요. 기후솔루션의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1년 4월 달에는 기후솔루션과 탈석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가 9월 달에 해외 석탄발전소 금융지원 중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요. 그러자 다음 해 5월 달에 KR Foundation에서 기후솔루션이 핵심 역할을 했다 그래 가지고 5억 원을 2년간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KR이 덴마크 KR Foundation이지요.

두 번째 또 하나 더 볼까요?

미국에 Packard Foundation이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퇴출 목적으로 최소 125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또 웬일인지 보니까 바이오매스가 우리나라 법에는 재생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체에서는 바이오매스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남동발전에다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바이오매스가 환경에너지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고, 더군다나 기후솔루션에서는 산업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고 소송까지 합니다, 취소소송. 바이오매스가 환경에너지가 아니라고 취소소송을 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지금 후보자지요—굉장히 기후솔루션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고 그 대가로 또 Packard Foundation에서 125만 달러 이상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미국의 Giving Green Fund에서 화석연료를 운반하는 선박금융을 하지 마라. 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선박금융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또 수출입은행에다가 압력을 넣습니다. 화석연료 관련 선박금융 중단해라. 굉장히 열심히 활동해 주니까 또 이 재단에서 기후솔루션에다가 6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해서 2024년, 25년 사이에 지원을 합니다. 굉장히 수출입은행에 압력을 많이 넣고 또 브리핑도 발표하고 하니까 이

재단에서 또 돈을 지원합니다. 그 기후솔루션과 당선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이 활동을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정책적으로 교류한 바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많은 정책이 보니까 기후솔루션의 정책을 대리로 국감에서도 하고 입법도 대리로 해 주고 그래서 기후솔루션이 약 8년 만에 1만 배가 성장했어요, 1만 배가. 직원도 2명이었던 직원이 118명으로 늘어납니다, 8년 동안에. 엄청나지요.

그래서 보니까 또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기후솔루션과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 하거나 주최를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한 게 열다섯 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후보자께서 국회의원의 신분을 활용해서 이 기후솔루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환경재단에서 이 기후솔루션에다 많은 기부를 하고 정책 로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컨택션을 주장,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기후솔루션과 해외 환경재단의 활동 때문에 너무나 많은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이 힘들어 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 기후솔루션에서 한 사례가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 폐기하라고 취소소송 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몰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한홍 위원 그게 25년 3월에 취소소송을 낸 겁니다. 몰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모릅니다.

○윤한홍 위원 아니,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성원 마무리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윤한홍 위원 2025년 3월에 기후솔루션에서 취소소송을 낸 걸 모른다는 얘기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제가 2017년에 설립할 때 참여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2020년 1월에 그 단체 이사직을 그만둔 이후에는 종종 정책적으로 교류한 사실은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하나하나 활동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제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게 탈석탄에 대한 입법을 어떤 특정 단체의 청부 입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수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법안이 석탄 금융을 제한하는 법안인데요, 그거를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내지는 어쨌든 거의 처음으로 어쨌든 제시한 당사자가 바로 저입니다.

○윤한홍 위원 이거는 아는데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취소소송은 LNG 발전을 또 반대하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2020년 1월 이후의 어떤 활동에……

○**윤한홍 위원** 오늘 모두발언에 반도체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까지 퍼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후솔루션에서 반도체산업까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LNG 발전을 쓰겠다고 한 것 때문이거든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반도체산업을 반대하는 취지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윤한홍 위원** 아니, 취소소송을 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발전원에 대해서 아마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하라는 요구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성원** 질문은 그만해 주시고요.

후보자님, 제가 답변할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하신 거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윤한홍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의할 테니까 지금 답변을 해 보세요. 나중에 추가질의를 또 할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알겠습니다.

어떤 환경단체의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처음에 전문가들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필요하하다고 생각해서 김앤장을 그만두고 그 단체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환경규제 완화조치를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다두고 그것을 막아내는 그런 여러 가지 EDF나 NRDC 같은 단체들의 연례보고서를 봤을 때 연간 예산이 1700억, 2300억 이렇게 되는 규모를 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환경단체는 환경운동연합인데 연간 예산이 전국적으로 해서 14억이고 대부분의 활동가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정말로 어렵게 10년 차가 되어도 최저임금을 받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윤한홍 위원**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 답변은 본질이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전문가들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위원장 김성원** 윤한홍 위원님, 잠깐만요.

○**윤한홍 위원** 그거는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이. 내 질문에 답변을 해야지.

○**위원장 김성원** 후보자님, 여기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위원장 김성원** 윤한홍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딱 그겁니다. 기후솔루션이 지금 8년 만에 이렇게 1만 배 이상 늘어났는데 후보자님의 역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당연히 저는 직접적 역할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국회……

○**윤한홍 위원** 그걸로 답이 됐어요. 그걸로 답이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직접적 역할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이따가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다음,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혜련 위원 지금 질의가, 이거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또 후보자님께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솔루션을 만들 때는, 그러니까 김앤장 변호사를 하시다가 기후솔루션은 환경운동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만두시고 만드는 데 참여하셨다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맞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서는 정책적으로 연대는 했으나 실질적인 운영이나 집행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맞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리고 지금 윤한홍 위원님께서 죄송하지만 너무 질의를 하실 때 완전 단정적으로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질의를 하셔서 저는 그거는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저도 이게 기후 단체들을 정확히는, 외국 기후 단체들이라 모르겠지만 덴마크 KR Foundation이나 Packard Foundation 그리고 Giving Green Fund 이런 펀드들은 아주 대규모의 환경 운동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의 기금을 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펀드들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저는 세 펀드 모두 처음 들어 보는 펀드입니다.

○백혜련 위원 아예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백혜련 위원 아마 그런데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덴마크 KR Foundation, Packard Foundation, Giving Green Fund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환경 운동을 하는, 사실 유럽이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만큼의 기금을 가지고 환경 운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환경단체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저도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변화된 산업 환경 그리고 세계의 변화된 산업 환경에 비추어서 기후위기 전문가인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신 것이 굉장히 잘된 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1월부터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본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입니다.

○백혜련 위원 아까 후보자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찾아가셨을 때 거기 요구사항 중에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소기업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번, 지금 주요국의 탄소·환경 규제가 확산 추세에 있지요? EU 같은 경우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의해서 탄소집약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공급망, ESG 경영상황을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28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지금 연방정부는 기후규제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적으로 탄소 규제가

확산됩니다. 특히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무 또 국내 중소기업에 공급망 배출정보 요구 가능하는 그런 법안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소 규제는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과 공급망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통상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저는 지금 글로벌, 어떤 민간기업들의 기준도 그렇고 이런 법률이나 제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공급망 전체에 대한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면 우리 중소기업들도 올해부터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이 리스크에 노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위원 이렇게 탄소 규제에 대응하려면 기업이 우선 자신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부터 알고 있어야 되고 탄소배출량을 산정·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설비도 개선해야 되고 검증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처음부터 쉽지가 않아요. 그 기업들이 담당할 인력과 전문성, 투자 여력이 모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PPT 두 번…… 띄워줬네요.

이게 연구자료들을 보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ESG 공시의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ESG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고 또 미국 기후테크의 산업전망 및 ESG 탄소중립 규제대응 방향분석 연구용역에 의하면 지금 탄소감축설비지원금도 낮아서 참여 유인도 작습니다.

뒤의 PPT도 띄워 주세요.

중소기업들의 탄소 규제대응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용·인력·설비지원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되는 것은, 직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그나마 자기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할 텐데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의하면 EU 수입자가 신고의무를 부담하지만, 완제품의 실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려면 원료와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까지 파악해야 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맞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의 공정에 관여했던, 수출은 하지 않았는데 그 기업들의 탄소배출량까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런 사실조차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중소기업부장관이 되신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실제로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동의합니다.

최근에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했을 때 보여 주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유럽의 탄소국경제도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했을 때 70%가 잘 모른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고객사가 ‘이제 너네들이 이 부품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했고 전기를 얼마나 썼느냐’라는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자료의 양식이 제각기 달라서 그것을 대응하

는 데만 해도 한두 사람의 그런 폴타임 일이 소요된다 이런 어려움을 얘기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혜련 위원 한 가지만 하면, 지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인프라 구축사업 하고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백혜련 위원 그런데 신청기업이 20개사 대비 12개밖에 안 됐어요. 그것 왜 이렇게 안 됐는지 파악해 보시고 좀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시급성을 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면요 우리 산자위원회에서 가급적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재단을 하거나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한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성원 의사진행발언하시겠어요?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백혜련 위원님 같이 의정활동 많이 했지만 꼭 상대방 위원 평가를 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제가 한 발언을 여러분들한테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백혜련 위원 아니, 너무 표현이 단정적이시잖아요.

○윤한홍 위원 아니지요. 나는 팩트만 설명했어요, 오늘. 팩트만 설명했지 그래서 지금.....

○백혜련 위원 팩트는..... 아니,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단정을 짓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지요.

○윤한홍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팩트만 하나하나 가져와서 했지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의심이 됩니다’,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도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위원장 김성원 백혜련 위원님 잠깐만요.

○윤한홍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팩트만 이야기를 하지 제가 추정해서 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회의 진행하실 때 잘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로 그렇게 배려하면서 해 주십시오.

다음은 임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문영 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임문영입니다.

이소영 후보자님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감사합니다.

○임문영 위원 후보자는 법률 전문성, 정책역량 또 그동안 국회에서의 조정 경험이라든지 민생현장에 대한 이해를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단순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에만 그치지 않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서 해법을 만들어 온 실천형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구단체인 유니콘팜을 창립단계부터 참여해 오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이고요. 무엇보다도 후보자가 했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배달 주문을 받으며 생계를 꾸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저희 모친께서는 세 번 정도 작은 가게를 여셨다가 길게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기 때문에 그 작은 가게를 운영할 때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어서 제가 학교 끝나면 가서 홀 서빙을 하거나 배달전화를 받거나 반찬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도왔습니다.

○임문영 위원 정책 역량이나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 이런 소상공인의 삶을 같이 얼마만큼 체험했느냐가 후보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하루 매출에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하루의 매출 또 손님 1명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또 장사가 끝난 뒤에도 임대료라든지 재료비, 인건비 등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직접 경험했다는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단순하게 시혜적인 정책이나 아니면 지원정책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서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소상공인의 삶으로부터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의 포부나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작은 가게들을 꾸리는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제 삶과 경험으로 깊이 공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아마도 정말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가슴으로 하는 정책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최근 실태를 알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여쭙보고 들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비용부담이 너무, 스무가지가 넘는 항목들의 비용부담이 지출이 돼서 1년에 1억 9000만 원어치 치킨을 파는 치킨집에서조차 주인이 가져가는 영업이익이 2000만 원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건비도 가져갈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소상공인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또 가슴으로 그렇게 공감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임문영 위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온갖 수수료 또는 가맹비 또는 광고비 등으로 매출에서 뜯겨 나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한 진주를 잃어버리면 하찮은 등잔을 가지고 찾으러 다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들 중심으로만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또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의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창업이 창업에 대한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또 전 국민적인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 실적은 자료화면으로도 잠깐 볼 수 있을 건데요. 이런 모두의 창업 부분이 이벤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결단을 하고 또 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출발점을 만드는 것인데 이런 창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장 또 실제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져서 중간에 폐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제 모두의 창업 1차 프로그램이 올해 말이 되면 최종 라운드 200명이 선발이 돼서 최종적인 투자도 받고 창업으로 이어지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런 창업기업들을 위해서 이 모두의 창업에서 발굴된 창업가들을 위한 전용 펀드와 보증 상품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후속 사업화에도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예산을 별도 트랙으로 편성해서 뒷 부분이 따라와 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문영 위원** 아까 박희승 위원님도 질문을 한 게 있는데 특히 지역에서 창업을 한 경우에는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되는 비율이 훨씬 적거나 경쟁력에 있어서 어려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이번 모두의 창업에서도 비수도권에서의 지원자들이 50%를 넘기는 등 정말 많은 전국적인 참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특히 비수도권 창업자들이 그런 창업 인프라나 또 벤처투자나 이런 것들에서 소외되지 않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원** 후보자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중기중앙회 방문하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위원장 김성원** 중기중앙회에서 후보자에게 전달했던 건의문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계속 질의답변 중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건의문 좀 저에게도 같이 공유 한번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제가 지금 산자위 한 7년 하는데 못 들어 본 내용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위원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제가 정책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 저 도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조지연 위원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의정활동 용역비 약 7000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약을 매년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두 차례에 나누어서 두 번의 계약을 했습니다. 한번은 7개월 또 한 번은 10개월……

○조지연 위원 그러면 7개월,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7000만 원이…… 그러니까 7개월에는 얼마, 그러니까 각 계약별로 얼마 지급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분할 지급됐고, 첫 번째 계약에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이 지급됐고요 두 번째 계약에서는 330만 원이 지급했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데 7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17개월로 곱하면 아마 그 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이례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의정활동비가 사실 국민혈세인데 이 7000만 원을, 계약서상에는 업무 범위를 상세하게 기술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컨설팅을 받으셨습니까? 자료 요구를 해도 답변이 안 와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 부분은 제가 점심시간에 더 챙겨 보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조지연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 업체가 2023년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소가……

○조지연 위원 어떤 내용을 자문받으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첫 번째 계약에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경선준비와 본선 준비에 대한 선거 전반의 컨설팅을 받았고, 구체적으로는 슬로건을 뽑아낸 다거나 정책 공약을 만든다거나……

○조지연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용역을 맺어서 이렇게 했으면 대면보고도 받으셨겠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면 이 컨설턴트가 이 업체의 대표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대표 컨설턴트라고 명함에도 되어 있고……

○조지연 위원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에 나온 그 대표가 지금 자문받으신 그 컨설턴트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이번에 지적해 주셔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게 됐었는데 등기부상의 임원은 가족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된 걸로 봤습니다.

○조지연 위원 아니, 사무실도 공실인 데다가……

그러면 대표는 가족이고 컨설턴트를 받으신, 자문을 받으신 그 컨설턴트는 다른 분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 한 분의 컨설턴트로부터 계속 자문을 받은 것이고 그 컨설턴트……

○조지연 위원 등기부등본상의 대표랑 다르다는 겁니까, 그 컨설턴트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대표 컨설턴트라고 하는 직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와 자문받으신 그 컨설턴트가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등기부등본상의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제 기억으로는 다른 성함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제가 그 법인의……

○조지연 위원 대면보고 받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대면보고 받았습니다.

○조지연 위원 의원회관에서도 대면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대체로 선거 직전이었던 때문에 저도 지역구 사무실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았고 지역구 사무실에, 의왕 사무실에……

○조지연 위원 2024년 지나서 선거 이후에는 지역 사무실에…… 선거 이후에도 그러면 지역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지역 보좌관들과 같이 회의를 하기도……

○조지연 위원 이것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지역 사무실 지역 보좌들과 같이 회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지연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주시면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알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청와대의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후보자 지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얘기하기……

○조지연 위원 왜 말씀 못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 과정을 통상적으로 밝히지는 않는 걸로……

○조지연 위원 아니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전화는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통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것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은 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대개 통상적으로는 인사수석이 하거나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실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말씀을 못 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통상 관례상 누구에게 어떻게 제안을 받았는지 발언하지 않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이 답변의 관례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청와대 인사수석이 그걸 전담하고 있는 분인데 당연히 그분이 연락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못 밝힙니까?

다른 분한테 혹시 받으셨습니까, 전화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조지연 위원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명 전화를 누구한테 받으셨냐 그것만 묻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지연 위원 혹시 지명되신 걸 기사를 통해서 아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아니요.

○조지연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조지연 위원 당연히 검증 서류도 제출하셨을 거고,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조지연 위원 그럴 거면 청와대의 어느 누군가로부터는 전화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으로부터요, 아니면 인사수석으로부터요, 아니면 비서실장으로부터요? 아니면 그 누군가로부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일단 대통령으로부터 받지는 않았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면 인사수석으로부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 과정, 그러니까 누구에게 제안을 받았는지 사실 밝히는 후보자가……

○조지연 위원 그러면 세간에 의혹이 되고 있는 부속실장으로부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평소에 잘 아는 분이 아니고요.

○조지연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니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분이 아닌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아니, 그분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지요.

국무위원이 국정 운영의 책임도 같이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조지연 위원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하락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그러면 아까 전에 장관후보자가 이렇게 많이 써 놓은 정말 좋은 말씀도 국정 동력이 약화되

면 실현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건 잘 아실 거고,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조지연 위원 국정 동력을 정말 어렵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 그리고 연임 개헌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해 장관후보자로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128조에 임기 규정의 개정은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이 단순히 헌법 규정일 뿐만 아니라 독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현대사가 반영되어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설사 국민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임기 규정 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지연 위원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 부분은 특정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물으시는 거여서 공직후보자로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지연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소영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가장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 주시는 분이다’. 진짜로 하실 말씀 다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지적이나 쓴소리하는 건 정말 어렵다. 대개는 지적을 안 한다. 이 의원의 지적은 진짜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위원장 김성원 마무리해 주시고요.

○조지연 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연임 개헌, 정말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직언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소신 지키면서 꼭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후보자께서 지금 소신 지키면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기존의 장관후보자들은 약간 좀 답변이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전화받으셨습니까?

인사위원장이니까…… 아까 관례상 발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소영 후보자는 좀 달랐으면 하는 마음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김현지 실장은 아니라고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확실히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원 그러면 강훈식 비서실장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예,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조지연 위원님 질의 중에 오투엔컴퍼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정책연구비로 지출하신 거예요,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신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정치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위원장 김성원 대표 컨설턴트 이름이 선지영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원 아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김 모 컨설턴트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그렇지요? 그 부인일 겁니까, 아마.

이상 나중에 더 질문드리고요.

다음,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후보자님, 그동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오늘 의견을 들어 보니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많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감사합니다.

○오세희 위원 장관직을 잘 수행할 것 같다 기대도 됩니다.

앞서서 말한 인사 지명을 후보가 꼭 밝혀야 되는 사항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저는 통상적으로는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오세희 위원 하지 않아야 되는, 저는 그게 필수는 아닐 것 같고 또 계약기간 중 업체와 등기이전이 안 된 문제까지 후보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저는 사실 그 컨설턴트 자체가 굉장히 업력이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을 자문하고 있는 분으로 추천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법인 이름이 무엇인지라거나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장관은 선명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정당해야 되지만 또 얼마나 능력 있나, 그 업을 수행할 수 있나, 많은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오세희 위원 지금 중기부가 AI·AX 사업의 실효성 방향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오세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PT 자료 보면 지금 AI 관련 사업 규모를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제조현장의 AX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유니콘 육성 및 인재 요즈음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 이런 예산을 줘도 그것을 운용할 사람이, 활용할 사람이, 인재가 없다면 그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기부가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3.0 전략,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오세희 위원 그래서 203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 2000개 구축 그리고 AI 도입률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오세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 16만 3000개 그리고 스마트공장을 도입했다는 곳은 3만 1700개, 도입했다는 게 19.5지요. 16만 3000개인데 그중의 75.5가 데이터 분석조차 불가능하다,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AI 전담 인력을 둔 기업은 고작 0.8, 한 1300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AI를 도입해 공정을 제어하는 곳이 0.1이라는, 160개사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담인력이 없는데 그런 첨단장비를 들여와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몇 개 구축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공장이 똑똑해졌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 양적 실적에 혹시 매몰되어 있지 않나,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스마트공장 보급의 효과가 생산성 30% 증가, 매출액 24% 증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양적으로도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지만 말씀대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사실 인력이 계속 바뀌거나 전문인력이 없으면 잘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질적인 인력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희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정을 혁신한 비율이 0.1이라는 것은 앞으로 현장 맞춤형 진단부터 데이터 관리 그리고 활용 기반 마련, 전문인력 매칭, 그러니까 전문인력 매칭이 사실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그걸 대표가 운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문인력 매칭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후 컨설팅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좀 연계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떠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100% 동감합니다.

○오세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지원도 하고 정책을 펼칠 때는 데이터, 종사자의 데이터가, 살아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아까 후보님께서 811만이라는 데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여태까지의 우리 정치 쪽에 있어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790만 얘기……

○오세희 위원 790만, 766만, 830만. 중소기업중앙회 가면 830만. 그게 뭐냐면,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830만, 소상공인도 790만이나. 그러면 1500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아니고 850만에 소상공인이 811만인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여기 PPT가 나와 있지요? 중소기업이 14만 그리고 소기업이 25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소기업이 14만, 소기업이 25만, 소상공인 811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혼용해서는 안 되냐? 중소기업은 매출이 400억에서 1800억이에요. 그러니까 확연히 차이 나는 거지요. 이게 10억하고 15억 그다음에 업종별 5인 미만 그렇게, 제조업 10인 미만. 그 구분이 확연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중앙회 가면 830만 이렇게 혼용돼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거의 혼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짧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가공일이 길다 보니 데이터가 24년도 거가 지금 나옵니다. 그렇지요? 요즘 얼마나 빠른 시간입니까, 특히 AI 기반해서. 그래서 이거를 정책대상을 좀 명확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국세청 매출액, 영업손익, 과세, 고용노동부 이런 것들을, 통계청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이 9월에 통과가 됐어요. 이런 게 살아 있는 통계가 돼야 지원이나 정책이 거기에 맞게 돼서 현실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저도 처음 접한 중소기업부에서 제공한 자료의 첫 페이지가 2023년 기준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이게 정확한 국세청 세금 신고 데이터 때문에 시차가 2년이 나는 거다, 다음 해에 세금 신고를 하고 그게 통계 집계되는 데 2년이 걸린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잠정치로라도, 좀 정확성이 떨어지더라도 적시성 있는 통계가 있어야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과학적인 정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희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청문회를 몇 차례 진행했지만 이렇게 무관심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나름대로 우수한 후보자로 평가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을 굉장히 주목하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2021년에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패배한 이후에 2030 초선 의원 공동 입장문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당시 조국 사태, 박원순 전 시장 그다음에 오거돈 전 시장 등 여러 가지 성비위 사태나 정부의 정책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이라고 반성하면서 쇄신을 요구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섯 분의 초선 의원님들 중에 여기에 장철민 간사님도 계시지요. 그래서 이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도 민주당이 살아 있구나, 그렇게 해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후보자께서는 최근에도 닥터나우 방지법에 반대토론을 하시면서, 물론 부결시키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공감을 이끌어 내신 바에 대해서도 많은 여야의 의원들께서 앞으로 후보자께서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서 굉장히 소신 있는 그런 내각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실 것이라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초선 오적이라는 그런 멸칭까지 얻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치권의 쇄신, 당의 쇄신을 이끄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감사합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나 과연 그 소신들이 지금 당내에서 계속 유지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후보자께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권을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서지영 위원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왜 기권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일단 제가 그 법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우려의 의견을 표명한 상태였고 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찬성 표결을 할 수는 없었고요. 또 여러 차례 정책의충이 열려서 몇 시간 동안 토론한 결과로 당론이 결정됐기 때문에 반대를 누르는 것도 어떤 그런 절차에 대한 존중이 아니 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 끝에 기권을 했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당시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서류 중심주의와 졸속 기소를 초래하고, 범죄자는 놓치고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셨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듯이 범죄자는 좋고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 확인한 법안에 대해서 왜 후보자께서는 절차의 존중이라는 것을 앞세워 기권하셨는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앞으로 국무위원으로서 후보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 정부의 내각의 어느 국무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대통령께 거부권을 제안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예결위 회의장에서 제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내각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 차문단에서도 심수 차례에 걸쳐서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내각의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국무위원으로서 만약에 이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당시에 국무회의에 올라와서 본인이 국무위원으로 참여했다면 그때도 기권 입장을 표명하시겠습니까? 하셨을 거라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가정적인 상황이어서 답변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쨌든 입법에 대한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서지영 위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때 국무위원들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서지영 위원 그때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 장관이었다면 어떤 입장을 표명하시겠습니까? 그때도 기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침묵하셨을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꼭 특정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신념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습니다.

○서지영 위원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소신 있게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분명히 장관후보자에게 다가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소위 말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는—5월 달경이지요—‘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견이 있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이것은 특정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인이라고 하면 발언을 했을 텐데요, 공직후보자의 입장이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공직후보자인데 아마도 곧 장관으로 임명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계류돼 있지만 결국은 저는 민주당 주도의 이 법을 강행시켜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서 국무회의에 올라왔을 때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피력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가정적인 상황이라……

○서지영 위원 후보자는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계십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실까요?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문위원으로서 청문회를 하실 때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방송위원회 방통위원장후보자에게 물으셨지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면서 물으실 텐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때의 이소영과 지금의 이소영은 다릅니까? 질문하는 자와 답변하는 자는 입장이 달라집니까?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자, 그때의 질문자 입장에서 지금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서지영 위원 당시에 후보자에게 답변을 회피한다고 지적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서지영 위원 지금의 이소영 후보자는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권한을 담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디오에서도 그런 입장을 피력했고 또 그 내용을 추진하는 공소취소모임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도 그런 입장의 일환이었습니다.

○서지영 위원 앞으로 후보자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정진욱 위원입니다.

이소영 후보자님이 이례적으로 여야가 비교적 능력……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들을 하시고 또 실제로 그동안에 살아오신 것이라든가 또 의정활동 그리고 그동안 보여 주셨던 어떤 경험, 경륜, 입장들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맨 처음 뵈는 때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후보자로, 대선후보로 지난번 나왔을 때 수행대변인 할 때 뵈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2022년.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21년·22년. 그때 보여 주신 어떤 능력이라든가 또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굉장한 개인적 신뢰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기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생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소상공인, 골목시장을 담당하고 있고 또 소기업, 중소기업,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분들의 대변자 역할을 중기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과 기존의 어떤 전통시장을 비롯한 민생 사이에 있는 스타트업·벤처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새로운 어떤 열정과 힘을 불어넣는 것이 혁신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이소영 후보자님께서도 또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유례없이 저는 중기부장관후보자로서 최적임자가 오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기업계에서도 이 후보자님 지명 환영하고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영 성명 낸 것 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아니요, 저도 성명을 보고 알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 그동안에 우리 중기부가 갖고 있는 숙제들 먼저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일 중의 하나가 태양광 죽이기입니다. 이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태양광발전장치 직생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처분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후보자님께서도 지난해 10월 21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장을 상대로 이 내용 관련해서 조목조목 질의를 하셨고 그것이 조달청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후보자님께서 10년 넘게 문제없이 납품해 온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갑자기 대대적 기획조사 하고 기준이 불명확한 직접생산 의무 위반을 근거로 과도한 처분을 했다, 비례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제재받은 사례 중에는 심지어 계약 규격보다 높은 스펙 제품을 납품했는데 그걸 계약 위반이라고 해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렇게 질의했는데 기억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기억합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항소를 포기하든지 업체들하고 합의를 하든지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똑같이 중기부도 영향을 받습니다. 중기부는 직접조사를 한 게 아니고 조달청이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처분을 내리는데 그 처분이 굉장히 과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조달청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전용한 이런 방식의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조사와 처분을 직접 수행한 조달청 같은 경우는 구조물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접속반 부분에 대해서도 조달청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모두에서 접속반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8월 14일 구조물 관련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고요.

이렇게 됐는데 중기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 위반 시에는 직생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기속 처분에 해당된다, 사실 그 말씀은 맞거든요. 그러면서 선택할 재량이 없다는 논리로 해서 기존 제재 처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안일한 대처다라고 보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저도 그 당시에 기재위에서 조달청 질의를 할 때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 직생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취소 처분으로 바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좀 과도한 처분이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조달청은 대부분 항소를 포기하거나 처분을 취소하는 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판로지원법 제11조 2항이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취소 처분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법률가시니까 잘 아실 텐데, 지금 남아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대승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문제를 장관님께서 해결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일단은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런 규정, 이런 설시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생, 직접생산 인정 취소가 되면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중기 간 경쟁제품 자체에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곧바로 기속행위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사전 단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고한다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거나……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 그리고 정치 컨설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치 컨설팅이라는 것은 컨설팅 업체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컨설팅을 하는 그 당사자, 컨설턴트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경험, 신뢰를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을 보고 선택을 하셨던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제가 사실 선거 경험이나 정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외부 영입 인사다 보니까 첫 번째 선거를 치를 때도, 또 두 번째 처음으로 경선을 치를 때도 경험이 없어서 외부 전문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는 큰 업체, 유명한 업체와 체결을 했었는데 거의 현장에 와 보지도 않고 연락도 잘 닿지 않고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주 현장에 와 줄 수 있고 구체적인 선거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업체를 고르게 됐습니다.

○정진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경남 창원시성산구 허성무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감사합니다.

○허성무 위원 기대가 큼니다.

후보자님께서는 21대 국회부터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핵심 멤버로 활동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맞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리고 지난달 31일 출근길 인터뷰에서 ‘규제개혁부 장관이 되겠다’, ‘제2의 타다 사태를 막겠다’ 하며 강력한 규제혁신의 의지도 밝히셨고요. 특히 비대면진료의 조속한 법제화와 전면 확대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말씀에서도 3페이지·8페이지·9페이지에 혁신을 강조하고 혁신을 수용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 주셨는데 낡은 규제를 깨고 벤처기업·유니콘기업을 키우겠다는 후보자의 열정 그리고 전문성 본 위원도 크게 공감하고 있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후보자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달의민족·쿠방이츠·야놀자 모두 출발은 벤처·혁신기업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맞습니다.

○허성무 위원 한번 자료를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벤처·혁신으로 시작했던 기업들, 이 주요 플랫폼 업체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현황입니다. 배달의민족 우리가 제일 잘 알지요. 6년 연속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혁신·벤처로 박수받았던 배달의민족이 국회 감사장에 이렇게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됐는데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지금 현실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달의민족은 혁신·벤처기업이지만 그 속에 입점돼 있는 입점업체 소상공인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 그다음에 광고비 이런 것들인데 이 플랫폼 공룡들이 벤처·혁신으로 시작했지만 골목상권의 포식자가 돼 있는 일종의 괴물 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이중성에 있는 것이지요. 타다 사태의 본질도 기득권의 장이라고만 볼 수는, 어려운 것입니다. 혁신이 들어올 때 기존 종사자의 충격 완화를 해 드려야 되고 또 상생을 위한 그런 사회적 대타협이나 보상 프로토콜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지 기득권의 저항만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기에는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처럼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존 방식대로 벤처규제 완화에만 머문다면 의료든 유통이

든 모빌리티든 전 분야에서 제2·제3의 배민 사태는 계속 반복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벤처·혁신기업들 속에 포함돼 있는 배달료가 몇 %고 이런 말씀은 이미 통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지는 않겠고요. 제일 잘 알고 계시는 후보자님께서 이 이중성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벤처·혁신도 우리가 장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개혁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대단한 벤처기업들이, 특히 이런 포털들이 정말 지금 국정감사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단골손님으로 나와서 질타를 받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장관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일단 제가 플랫폼기업의 편을 드는 입장은 아닙니다. 규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사업이 시작될 때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진입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규제를 많이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떠한 기업체가 진입을 하고 나서 독과점 기업이 되면 그 독과점 기업으로서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해서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근사한 가치도 제시했고 또 건물주와 경쟁하겠다고 하는 슬로건도 굉장히 참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과도한 수수료를 통해서 너무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게 과거에 어떻게 시작했는지와 무관하게 지금의 독과점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성무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혁신벤처들을 많이 탄생시키고, 그게 중기부의 역할이고 동시에 또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되는 게 중기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허성무 위원 그런데 이 역할을 둘 다 잘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가끔 이런 충돌과 큰 모순이 발생할 때가 있어서 그것을 중기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미리 사전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 단계에서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독과점 상태로 갈 때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셨는데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진입 단계에서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배달앱·숙박앱 등 플랫폼의 이런 과도한 수수료, 광고비 횡포를 제어하고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상생 대책이 조속하게 있어야 된다. 그때그때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제도화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미 여러 건들이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실 때도 IT 혁명, 인터넷 혁명, 지금 AI 혁명, 여러 차례 혁명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혁명의 수혜 기업들이, 아까 자료에서 보여준 저 기업들이 다 이 수혜 기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혜 기업들이 700만 소상공인들을 또 어떤 면에서는

종속시키고 괴롭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 이미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미리 지금 제도화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걸 생각을 해 보고요.

둘째는 부처 차원에서 선제적인 갈등 조정 체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중기부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후보께서 굉장히 전문가이시고 또 통찰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 좀 듣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사실 지금까지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갈등들이 대한민국에서 여러 차례 갈등으로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결과로 이어진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가 갈등 조정에 능숙하거나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갈등 조정 절차, 제도, 기구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방법이 최적인지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자체가 그런 갈등 조정 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성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세종시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저는 일자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현재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고용 비중으로 보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자리 문제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중소기업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일자리가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기업을 많이, 또 양질의 기업을 많이 만들면 일자리는 해결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세상이 좀 달라졌지요. 하이테크나 플랫폼 자동화 이러면서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 돼서 중소기업이 많아지거나 활성화된다 그래서 일자리가 같이 따라오는 이 함수관계가, 이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가 지금까지는 기업을 진흥·육성 하는 데 애를 쓰면 일자리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업을 진흥·육성 하는 것과 아울러서 일자리를 어떻게 함께 동반해서 해결할 거냐 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부에, KPI에 이 일자리지표가 없어요, 지금. 그냥 기업을 어떻게 하면 잘 육성할 거냐,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좀 필요한데 또 하나는 일자리 문제가 단순히 중소기업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청년 문제입니다, 청년 문제. 지금 이소영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청년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도 갖는 그런 장관 겸 국무위원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청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청년 문제 제일 심각한 게 골든타임 5년, 사회에 나와서 5년 안에 일자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가 돼요. 그런데 이 골든타임 5년이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수도 줄어들고 질도 안 좋고 그래서 청년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5년 동안 어떤 인생을 설계하고 어떤 인생을 시작할 거냐 이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위기에 빠졌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지금 우리 국정 지지도가 흔들리고 한단데 특히 2030 청년들 이렇게 불안한데 지지할 수가 없지요. 어떤 정권도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중기부만의 일이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지금 정부의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방향과 핵심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대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일단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른바 고용유발계수라는 게 있어요. 2000년에 매출 10억 원 당 25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2023년에 이게 몇 명 됐을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많이 줄었을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8명. 한 세대 만에 3분의 1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은 2000년 정책이랑 비슷해요, 지금. 중기부 정책도 비슷하고. 반도체는 아예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반도체가 아무리 활황이 돼 봐야 이게 안 풀리는 거지요. 유니콘들, 대단한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이 되잖아요. 유니콘 똑같아요. 유니콘이 매출이 조 단위가 넘어가도 고용 인원 1000명이 안 됩니다.

또 AI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이거 잘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김종민 위원 제일 핵심은 이중구조예요. 아니, 일자리가 아직도 많아요. 구인난도, 그런 기업들도 많고. 그런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잘 없대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중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볍게 보는데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이중구조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요 198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예요. 이게 1980년에는 90%였어요,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지금.

아니, 경제는 성장하고 대한민국 발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발전이에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갔지요. 이걸 어느 정권도 해결을 못 해요.

민주당 정부도 민주정부라고 하는데, 진보정부라고 하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국무위원 되시고 장관 되시면 이 문제 해결하겠다, 여기에 직을 걸겠다 이런 각오로 하셔야 돼요. 이거 해결 없이는 지방소멸 문제, 대학 서열화 문제 이런 거 다 해결 안 됩니다.

지금 해외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해외 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50% 정도 걸쳐 있는데 대만이 80%, 영국 78, 미국 74, 일본 74입니다. 이게 선진국 맞아요, 우리나라 이거? 이런 자료를 놔두고 우리가 성장률이 어떻게 되니, 수출이 어떻게 되니 맨날 이런 것만 가지고 국민들한테 국정운영 잘한다 이러니 국민들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거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근본적인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거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양극화, 특히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모든 양극화 문제의 제일 핵심 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 목표, 핵심 업무 지표 KPI를 일자리 양극화…… 특히 중소기업이잖아요, 이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중구조거든요. 중소기업 문제 해결의 핵심은 중소기업 일자리의 임금이 최소한 80% 가까이 가는 거, 장관 되시면 장관 임기 내에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하셔서 여기에 실적

을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16초 안에는 어려워요. 제가 이따 보충질의 때……

(웃음소리)

○위원장 김성원 추가 시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세 가지 대안을 말씀드릴 테니까 꼭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위원님, 무겁고 아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전에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명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민 위원 그런데 이게 누구 업무 같아요, 장관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대한민국 산업……

○김종민 위원 재정부장관 업무입니까? 산업부장관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 아니, 중기부장관 업무예요, 이것. 이중구조의 핵심이 중소기업인데. 맞지요?

○위원장 김성원 후보자님 답변이 길어지니까 추가질문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수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님으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산중위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드물게 제가 손들어서 중기소위를 희망하고 있는데 역량 있고 전문성 있고 추진력 강한 그리고 소신 있는 후보자분이 지명되셔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감사합니다.

○전은수 위원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5%로 낮추고 발행 규모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알고 있습니다.

○전은수 위원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5%로 조정하되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사용분에 추가 환급을 제공하면서 지방과 전통시장에 사용되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할인율을 5%로

낮추면 누가 사겠냐 하는 현장의 비판이 있습니다.

기사 한번 보여 주세요.

지난 10%에서 7%로 할인율 낮추자 월 판매액이 반토막이 났다는 건데 우리 당에서 요새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이라고 해서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많은 부분들에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요구사항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판매실적을 중기부에서 받아 봤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에 따라서 판매 실적에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 보여 주십시오.

할인율 구간에 따라서 판매실적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졌는데요. 15%가 할인되었던 2024년 9월에는 6754억 원 그리고 2025년 1월에는 6348억 원, 판매 규모가 월 6000억 원대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 할인율로 적용된 지난 1·2월에도 월평균 5000억 원 안팎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할인율이 낮아지니까 판매실적도 급감했습니다. 7%로 낮추니까요 올해 3·4월 판매액은 월평균 2200억에서 2400억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할인율 10% 대비 절반 이하로 쪼그라든 겁니다.

지금까지는 할인율이 소비자들에게 소비 유인책이 되었는데 그리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5%로 적용한다, 환급하는 게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전통시장과 지방에 더 타기팅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방법이 국민에게 어떻게 체감될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온누리상품권이 전국에서 쓸 수 있고 또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에서 공평하게,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특정 비수도권·수도권 전통시장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차등화해서 소비를 유인·유도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은수 위원 맞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수 촉진의 일환으로 후보 시절에 시장 다니시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중기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이 이 방향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할인율 개편에 따라서 환급 혜택에서 배제된 수도권 골목상권 점포들의 타격도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균형발전, 지방균형성장 이야기하고 있지만 골목경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던 골목상권이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한번 저희가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재고해 주실 수 있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이번 27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일부 감소했고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제도가 서로 상호보완적이고 장단점이 있지만 온누리상품권

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은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부분은 임직원 기업인수 특별법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 중에서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 중에 기업 승계가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중소기업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60세 이상 경영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퇴 시점이 다가와도 회사를 승계받을 사람을 찾지 못한 기업이 적지 않다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은 왜 아버지의 공장을 물려받지 않을까’ 이런 유튜브 콘텐츠를 봤는데 답이 뭔지 아십니까? 40%에 달하는 비율로 자녀가 원치 않아서 가업 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이 승계 문제가 개별 기업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경제의 기반인 제조업에서 후계자 부족으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기업이 약 5만 6000개, 이 가운데 85%가 비수도권 소재입니다.

기업 승계는 지역경제 그리고 앞서 김종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말씀처럼 지금은 가업 승계라거나 이런 제도가 있지만 실제 최근의 세대는 나의 삶과 나의 취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승계 자체를 원치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는 제삼자 M&A를 활성화하는 그런 법도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외국에서는 임직원이나 임원들이 자금을 마련해서 인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수 위원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셔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는 상속·증여를 통한 친족 승계 위주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친족 승계 외에도 임직원이 기업을 인수하는 내부자 승계 등 제삼자 승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임직원 기업인수 특별법 제정을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자금 조달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승계 이후에 회사가 과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자금 조달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 임직원 기업 인수의 성공 사례, 한국종합기술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사례를 잘……

○전은수 위원 직원들이 개인 대출하고 인당 5000만 원이 필요했던 점을 인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명되시면 이 부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알겠습니다.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주질의 마지막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전은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는 독일·일본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과 차이 중의 하나가 100년 기

업, 200년 기업이 없어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김도읍 위원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후계자가 없어서 100년 기업, 200년 기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업을 승계하려고 해도 지금 상속세 때문에, 후계자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면 공장을 팔아야 상속세를 내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세대가 달라서’ 장관후보자께서 이야기했는데 요즘 세대들이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가업 승계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상속세를 줄이자…… 가업 승계를 못 하게 상속세를 하니까 공장을 팔아야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근로자들 일자리 잃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의 영속성이 떨어지고 아예 소멸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가업 승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그 부분도……

○김도읍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비용구조 개선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후보자께서도 인사말씀에 이것을 포함시켰던데, 후보자님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소상공인 비용구조 개선 언제 결론을 낼 것 같아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소상공인들은 장관후보자의 말만 믿고 희망고문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소상공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제조업체 수가 한 60만 개 이상 되잖아요. 그렇지요? 소상공인하고 하면 상당한 국민들이 지금 소상공인, 제조업 이런 데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고통받는 문제가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지속 불가능한 비용구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비용구조인데 그 비용구조가 개선이 되려면…… 지금 결과를, 시기를 예측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비용구조가 개선되기 전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조업 이런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게—뒤의 분들은 알 거예요—단기 운영자금이에요.

당장 기업에 납품을 하면 대금은 몇 달 뒤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자재 구입을 하면 즉시 자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 중간 공백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김도읍 위원 기술보증에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기술력은 있지만 당신네 신용이 뭐냐?’. 당연히 신보를 가면 신용을 따져요. 기술보증을 가도 신용을 따져요.

아시다시피 이 정부, 이재명 정권에서 대출 다 막아 났지요? 결국 어디 갑니까? 고리

의 사금융, 제2·제3금융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반드시 따져 봐야 되는 거예요.

후보자님, 알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김도읍 위원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후보자님 즉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지난한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노동시간 규제와 임금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

○김도읍 위원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포괄임금제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소관 상임위에 지금 계류돼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제가 직전에 노동위원회 간사여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도읍 위원 그러면 입장은 어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포괄임금제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일부 우려가 아니고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히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밝힌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김도읍 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과거에 제조업 중심으로……

○김도읍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지식산업에 대해서는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 지식산업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산업마다 일의 특성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지방에 주로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 결국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써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일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월급 많이 받는 데로 가는 거예요, 어찌 됐든.

그런데 주 52시간에 딱 걸려 가지고 그마저도, 외국인 인력마저도 수급이 어려운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현장이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52시간제로 기업들이……

○김도읍 위원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자본시장도 좋지만 당장에 중소기업들이 허덕허덕

하면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 또 이야기할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노동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상당히 전투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고요.

후보자님, 지금 두 가지 조금 명확하게 답변을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기부장관후보자로서의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간사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중기부장관후보자로서의 입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 52시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지금 화이트 이그젼션만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블루 이그젼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이것은 중기부장관후보자로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사실 근무시간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것을 금지하거나 임금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고 그래서 그로 인한 과로사도 굉장히 많고 이런 노동자 복원의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과거와 같이 공장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장소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노동에 있어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해서 법률안을 심의한 다음 인사청문회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안내해 드린 것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잠시 중단하고 의사일정 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출석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 법률안은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등 사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9월 9일 장철민 의원이 발의하여 2026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회법 제59조는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법률안의 상정을 금지하되 긴

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검찰청법 폐지 등 개정된 사법체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을 통해 동 법률안을 상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오늘 이렇게 우리 법안 한 건을 급하게 상정시키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7월 31일 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 관련된 부속 입법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졸속 입법 했다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공소청법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급하게 부랴부랴 지금 발의하고 처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실질적으로 15일간 숙려기간을 가지도록 한 것은 국민들께서도 이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간사 간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법안소위도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촛극이 벌어진 데 대해서 민주당에서 또 민주당 위원님께서 최소한의 사과와 유감 표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실 수사 부분이나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가 또 신뢰가 경찰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수완박을 끝까지 추진했으면 적어도 그에 따른 영향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오늘날만큼은 민주당 위원들께서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김성원** 국가 형사사법체계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안을 이렇게 급박하게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 또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 등 사법체계의 개편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또 민생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 입법 상황에 대한 유감과 별개로 동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7) (14시26분)

○**위원장 김성원** 의사일정 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정에 필요한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률입니다. 다만 현재의 입법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을 통해 동 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동 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공무원 등이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검사를 제외하는 대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청한 경우에도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이 가능함을 법률상 명확히 하고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사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안의 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동 법률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 정보제공 대상 기관을 ‘수사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철민 의원이 제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월 2일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신설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시는 법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국가 형사사법체계와 관련된 법률안을 이렇게 심의하여 의결하게 된 점에 대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께서는 오늘 입법 절차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유념하셔서 향후 제도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정부 입법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10분에 속개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인사청문회

○**위원장 김성원**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인사청문 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인사청문회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이 위원**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장관후보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소영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감사합니다.

○**김원이 위원** 엄중한 시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진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 줄 것을 먼저 주문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오전 청문회 중에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 못 하신 것 있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현재는 없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물을게요.

중기벤처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해 보고 싶은 혹은 이것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성과를 내겠다 하는 것 한 세 가지 정도만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죽 말씀 한번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특정한 정책에 대한 성과에 앞서서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인데요. 세상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되었을 때 국민들께서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 생각을 해 보면 근엄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는 그런 관리형 장관이 아니고 때로는 좀 울퉁불퉁해 보이더라도 관성에 따르지 않고 때로는 부딪치기도 하고 그렇게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기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는 게 부정적인 뉴스로 보도가 될 때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 정책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도 해 보고 싶고 또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분란이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 주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해 보고 싶은 일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규제 개선 아이টে를 발굴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우연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국회가 2011년에 추진했던 화장품법 전부개정이 뒤에 자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2011년 전부개정 전까지는 원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라서 허용되는 원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는데 그때 규제가 개선되면서 네거티브 규제, 그러니까 금지되는 원료 말고는 전부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어서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원료를, 미나리든 달팽이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두 번째는 제조·판매업을 분리해서 신설하면서 커다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작은 기업이나 1인기업들도 화장품을 기획해서 자기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규제 완화가 K-뷰티, K-화장품의 경쟁력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그리고 멀리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좋은 규제개혁 아이টে를 발굴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도 여러 번 소상공인들이 너무 지속 불가능한 비용구조에 고통받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중기부가 접근해 보지 않은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취지냐면 우리나라의 표준적인 자영업자의 유형, 치킨집, 국숫집, 편의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런 사업장들이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벌어서 어떤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영업이익은 얼마를 남기는지 이런 것들을 숫자로 지표화해서 관리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경북 성주시에 있는 치킨집이나 대전에 있는 국숫집 이런 몇 가지 모델 사례들, 실제 장부상의 그런 대차대조표를 보고 영업이익률이 아까 말씀드린 1억 9000 치킨을 파는 가게가 연간 2600만 원을 가져가는 현실 이런 것

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비용 부담 구조가 지표화되면 물가상승률에 비교해서 그것보다 낮게 비용 상승을 누르는 정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중기부가 흩어져서 하고 있는 비용 경감 대책들, 예컨대 공공요금 지원이랄지 착한 임대료 정책이랄지 공공배달앱을 통한 수수료 절감 정책이랄지 이런 산재되어 있는 정책들이 그 목표와 로드맵 아래 체계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5년 전보다 얼마나 비용 부담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정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김원이 위원** 저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좀 저돌적으로 하겠다, 울통불통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와닿는데 사실 중기벤처부장관님이 보호해야 될 혹은 함께 일해야 될 대상이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주체들 중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저돌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그분들의 어떤 상승, 좀 더 확장되고 커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중기벤처부장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울통불통해도 되겠다. 그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좀 더 제대로 내도 되겠다, 이런 부탁 말씀 드리고.

하나는 오늘 중소기업 승계에 관한 상속 문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중소기업 승계 얘기하면 주로, 상속 얘기하면 가족 간 승계라든가 임직원 승계만 주로 얘기를 해 왔는데 사실은 일본처럼 M&A에 의한 승계도 지금 우리가 검토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임원 중에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M&A라도 해서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상법에 따른 각종 합병 절차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례들을 좀 만들 필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다 이런, 사실은 제가 낸 법안인데요. 그 법안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오전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금 중소기업 CEO들의 고령화가 5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하고 또 후계가 부재한 그런 기업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게 창업자가 일을 못 하게 된다고 해서 기업이 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의 계속성을 위해서 제3자 M&A든 임직원 인수든 이런 방법이, 길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절차적인 특례든 세제 특례든 자금 조달에 대한 허용이든 펀드 조성이든 그런 것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이 위원** 상법에 보면 상법에 따른 각종 합병 절차가 있어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거기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소규모 합병이라든가 영업 양수, 채권자 보호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주주총회 소집 통지 등 이런 것에 대한 기간 단축, 이사회 결의를 준용한다든지 주식매수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특례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혹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풀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저는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인 기업, 그러니까 혼자서 장사하시는 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라고 표현합니다.

○박성민 위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이렇게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을 때는 그렇게 적는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이렇게 하면…… 1인 자영업자 그렇게 하지요? 소상공인은 아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소상공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한성숙 장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못 하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혼자서 장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굉장히 많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지 못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전혀 데이터가 안 돼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게 제가 몇 퍼센트인지를……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도 그게 얼마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분들에게 어떤 게…… 그저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데이터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은 지금까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머니하고 같이 장사를 하셨는데 어머니는 건강하게 잘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잘 지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 모두발언에서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자주 하신다,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는 자영업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둔 채 소상공인들에게 더 노력하고 더 혁신하려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저는 정말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중기부장관이 물론 중소기업들 육성·지원하고 강소기업 키우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장관이기 이전에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든 1인 영세상인들, 혼자서 사시는 외로운 분들, 그런 분들부터 먼저 보살펴야 된다 이런, 중기부장관 지명받고 그런 생각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자영업자가 늘어나게 된 배경이 사실은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임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용원을 고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많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민 위원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면 대체적으로 큰 기업들에 취업을 하고 취직을

합니다마는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면 중소기업들에 잠깐 이렇게 있다가—취업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결국에는 자영업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저는 구의원부터 해서 그런 현장의 서민생활을 잘 아는데 보통 보면 창업을 1년에 100만 명 정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80만 명이 폐업을 합니다. 통계가 제대로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은 결국에는 1년 생존율이 60%, 그다음에 5년 되면 삼십 몇 %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5년 차 생존율이 30%대입니다, 36%.

○박성민 위원 그런데 1인 영세상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결국에는 퇴직금 조금 받아서, 그분들의 창업에 들어가는 돈이 보통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결국에는 5년 이내로 거의 80%가 문을 닫습니다. 다 까먹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의 생활이?

그것을 지금 국가에서 구제를 하고 장관님이 깊이 고민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런 상황……

○박성민 위원 통계도 없는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사회안전망에 아직 안착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노란우산공제라거나 고용보험·산재보험 이런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아직 고용·산재보험도 1%대밖에 가입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상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또 폐업하게 되시더라도 그런 생활비, 생계 그리고 노후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게끔 사회안전망이 더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저는 중기부장관만큼은 후보자님처럼 법학을 전공하고 이런 분보다는 정말 우리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상공인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깊이 이해하는 이런 분들이 오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헛구호만 가지고 했어요. 데이터베이스 한다 해 놓고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했어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도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어느 쪽에 도움이 되는지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 봤나 하면 현장에 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가 그냥 또 임기 끝나면 끝이 나고 하는데, 지금 후보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몇만 명이 어느 정도로 1인 기업을 하고 있는지, 그게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치킨집에 1억 5000만 원, 얼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1억 9000만 원 매출……

○박성민 위원 그것은 아주 잘되는 치킨집입니다. 1인 치킨집이 1억 90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1년에 1억 9000인데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1년에 1억 90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은 한

달에 한 2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면 결국에는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매출 올려야 됩니다. 그것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네 골목에 가 보면.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오히려 골목의 최밑바닥에 있는 이런 1인 영세상인들, 난전에 계시는 할머니분들,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부터 보살펴야 되는 게 중기부장관이다. 저는 그래서 중기부장관은 정말 제일 어려운 데부터 보살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 충분히 조사하시고 다 해 주시고 코로나 때 빚진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해서 탕감도 좀 과감하게 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박성민 위원 코로나 때문에 빚져 가지고 지금 난리 나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제일…… 영세상인들, 혼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눈물부터 닦아 드리는 그런 장관님 꼭 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발로 뛰면서 열심히 배우고 잘 채우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먼저 후보자 지명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감사합니다.

○차규근 위원 아까 후보자께서 모두발언 한 것을 다 경청을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하신 것 같고 균형 있게 이렇게 내용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만 저는 이게 벤처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내용상으로는 균형 있게 돼 있지만 과연 실질적인 힘의 균형에 있어서는 현실이 안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규제개혁부장관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통상의 규제라는 것이 물론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이나 이런 데 대한 규제도 있긴 합니다만 통상적인 규제는 수혜자가 대부분 대기업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경제적 강자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의 규제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규제개혁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하신다 그러면 자칫 장관후보자께서 앞으로 말씀, 말을 가능성이 높으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역할하고는 이게 좀 충돌되는 면은 없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청문회 자료에서 다시 한번 부서 이름에 대해서 골똘히 한번 쳐다보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입니다. 이게 이름상으로는 소상공인은 드러나지가 않지요. 소상공인은 흔히 우리가 기업이라고 보지는 않고 굳이 말을 붙이자면 1인 기업이라고 칭하기는 합니다마는 법인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이름 자체에서 소상공인은 약간 소외되어 있구나, 이름 자체에서 들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가 원래는 산자부 소관이었다가 외청으로 독립해서 이렇게

된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인칭을 준비하면서 죽 살펴보니깐 여기, 중소벤처기업인데 중견기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차규근 위원 그러면 중견기업은 어디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산업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는 중소기업청 시절에는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청 소관이었던라고요. 그런데 중소기업청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중견기업은 산자부로 가고 대신에 중소기업에서 벤처가 이름이 붙은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차규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질서에 있어서 대규모 규제가, 규제라는 것이 대기업의 어떤 시장 잠식이나 우월적 지위 남용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조절하고 막기 위해서 많은 규제들이 도입이 돼 있는데 장관님께서 너무 규제개혁에 관한 것을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자칫 이름에서도 조금 소외돼 있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회적, 상대적으로 힘이 좀 열위에 서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 노동 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산자부장관께서 중국의 '996' 언급을 하시면서 메가프로젝트 이런 데의 경우는 예외가 좀 필요하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그런 법안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도 최근에 52시간…… 최근에 아니군요. 작년 2월인가요? SBS 라디오에서 52시간 예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52시간 예외를 주로 요청, 요구하고 있는 그룹은 대기업이거든요.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도 고소득 노동자의 경우는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52시간 예외가 허용됐을 때 그 여파는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높은 대기업 노조보다는, 대기업 노조는 교섭력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대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소기업 그리고 하청, 재하청 이런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교섭력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이런 하청, 작은 기업들, 후보자님께서 말씀할 걸로 예상되는 지금 중소·벤처기업에 관련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장관님, 996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차규근 위원 그러면 996.ICU는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뒤에 앉아 계시는 중소기업부 간부들께서 제대로 보좌를 안 해 주신 겁니다. 왜냐니까 제가 한 달 전쯤에 상임위에서 산자부차관을 상대로 이거 질의를 했어요. 그때 분명히 중소벤처기업부 간부들도 여기 앉아 있었을 건데 이런 기본적인 걸 갖다가 장관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좀 제대로 보좌를 하시기를 바라고.

996.ICU는 뭐냐니까 중국에서 996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리스트를 갖다가 올리면서 이런 회사는 가지 말자라고 연구자들이 사이트를 만든 게 996.ICU입니다.

ICU가 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중환자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렇습니다. 인텐시브 케어 유닛(Intensive Care Unit)입니다.

이런 52시간 노동시간의 예외라든지 거기서 결국에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기업의 요구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피해가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할 중소·벤처기업 관계되는 종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규제개혁부장관이 되겠다는 장관님 포부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말씀할 분야가 대기업장관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셔야 될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평소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예외 내지는 변경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대한민국의 모순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국민들은 주 52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범위가 점점 사회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 52시간제가 너무나 문턱이 높다 보니까 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특수고용노동자나 계약체결, 프리랜서, 위탁계약 이런 식으로 자꾸 바깥으로 노동자들을 밀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순적인 현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벤처기업이나 작은 기업에서는 10명, 20명의 스타팅 멤버가 밤을 새면서 브랜딩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대표들이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을 넘겨서 직원이 일을 하게 되면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 52시간이 아니라 훨씬 더 길게 근무하면서 가혹한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과의 이 법의 괴리,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그런 다양한 현장들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대한민국의 너무 엄격한 근로시간 제도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다양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규근 위원 지금 현재도 연장근로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예외적인 제도, 그걸로 인해서……

○위원장 김성원 차규근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차규근 위원 52시간 예외 아니더라도 많은 수익을 올리지는 않았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향엽 위원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권향엽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전문성도 있고 또 기후대응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있는 후보께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감사합니다.

○권향엽 위원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국회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께서서는 지난 21대 국회 때 산중위에서 활동을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권향엽 위원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의 중소벤처기업부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2차관이 신설되면서 2차관 부처가 되기도 했어요. 또 국가창업시대를 비롯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정 어젠다를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향엽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 보면 21대나 22대나 정부조직법상으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2차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비중도 그만큼 커졌다는 것입니다. 2차관실 산하에 소상공인정책실하고 상생협력정책국이 있습니다. 그 역할도 커졌고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이 2차관실을 신설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소상공인 정책을 부처 안에서 굉장히 주류화시키고 또 중요하게 더 격상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러시지요? 소상공인정책실 산하에는 소상공인, 장애인, 지역상권, 전통상권 등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실 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장관으로서 혹시 포부가 있으시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작년 말에 2차관이 신설되면서 아직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요. 일단 지금은 1차관실과 2차관실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관실에서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들과 할 일들을 더 많이 개발해서 더 역할을 많이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향엽 위원 오전에도 오세희 위원님 등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또 소상공인정책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것 그리고 830만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런 삶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립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권향엽 위원 그리고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영문명 혹시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MSS, 'and Startups'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권향엽 위원 거기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스타트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중소벤처기업부라고만 하지만 거기 영문명에 스타트업이 명기되어 있듯이 굉장히 중요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수도권 중심의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한 편입니다. 모두의 창업에 응모를 하는 비수도권의 창업자들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그 여건은 취약한 상태인데요.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기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책으로는 전국에 창업도시를 네 곳 지정했고 여섯 곳을 더 추가로 지정해서 창업 거점을 비수도권에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지역성장펀드라고 해서 지역에 주로 투자하는, 그런 벤처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가 만들어져서 운용되고 있고 또 딥테크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서 인재 양정도 비수도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달 업무보고했었던 내용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면 한국벤처투자 지역사무소 비수도권 확대 외에는 마땅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고 챙기셔야 모두의 창업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1대 전반기 상임위 시절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올해는 16조였는데요. 아마 그때는 훨씬 더 작았을 것 같습니다.

○권향엽 위원 13조 정도 되거든요. 2020년에 13조 364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 22년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2027년도,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금액인 18조 724억 원입니다. 후보님이 그때 상임위에 계셨을 때보다 무려 4조 7084억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창업부터 채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되는 성장의 온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사업 45개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봤었는데요. 후보님께서 이 45개의 사업들 중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마침 인포그래픽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모태

펀드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예결위 간사로 일할 때 사실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내시기도 했었는데 최소한의 감액만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방어했던 기억이 나고 실제로 모태펀드가 벤처 창업 생태계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면 모태펀드, 창업기업 용자, 소상공인 용자 이런 것들이 48%를 차지합니다. 전반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는 좀 편중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모태펀드도 사실 현장에서의 수요는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7년 정부안에는 대폭 증가해서 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사실 이렇게 질의하게 되니까 좀 어색하네요. 저희가 후보자 지명 이후에 또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이소영 후보자가 맡고 있는 앞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 그냥 단순하게 중기부장관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 어떤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사명도 있는 것 같고 또 아까도 기후위기에 대한, 지금까지 기후 정치에 대한 사명들 또 그 와중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어떤 사명 이런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제 속에서도 그 하나하나들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어떤 방법론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진짜 어려운 역할을 부여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큰 응원과 함께 또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감사합니다.

○장철민 위원 저희가 지금 후보자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사실 유니콘팜을 함께하면서 스타트업들이나 스타트업 생태계가 대한민국에서 더 큰 역할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닥터나우 관련된 법에 대한 반대토론들도 있었었고 실제로 여러 스타트업 업계가 후보자의, 장관이 앞으로 장관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대전에 있는 기업 중에 루센트블록같이 과거에 샌드박스를 통해서 업역을 시작했지만 지금 현 제도권에서 새로운 어떤 질서가 생기는 데에서 예비심사, 본심사를 거쳐 나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큰 기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금융위 단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후보자께서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이랑도 자본시장 관련된 토론도 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후에도 구체적인 의견을 좀 더 드릴 거고요, 후보자께서도 이후에 장관으로 임명되시고 난 이후에 루센트블록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안착되고 더 발전해 나가는 데 역할을 더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국회 연구단체로서 유니콘팜 일을 해 왔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진짜로 공식적으로 중기부장관으로 이후에 임명이 될 거고 저도 산중위에서 간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냥 단순히 저희끼리 모여서 의원 연구단체로서 일할 때보다 우리 국가적인 시스템으로서 제도화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이런 어떤 제도적인 접근 가능성들을 늘려 주는……

그러니까 저희 개인들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더 제도화하는 노력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아마도 우리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그런 큰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들에 대한 영역 그리고 그런 제도화의 영역에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또 덧붙여서요. 규제 개혁에 대한 앞으로의 장관 직무에서의 활동 강조도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지난번 이소영 후보자가 본회의에서 닥터나우 관련된 반대토론을 할 때 여야 상관없이 의원들이 가장 공감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논리 중에 가장 핵심 논리가 동일한 규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식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여야 의원들이 많이 공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까 후보자께서 사례로 든 K-화장품, K-뷰티와 관련된 그렇게 여러 영역들에 대한 규제 완화책도 규제 개혁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동일 취지의 입법 목적이나 동일 취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더 적은 비용을 치르는 규제로서의 전환, 그런 어떤 기업이든 아니면 국민들, 경제 주체들이 더 적은 비용과 더 적은 어려움으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방식의 규제 개혁이 어떻게 보면 더 실현 가능하기도 하고 더 수월할 수 있는, 수용성이 높을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나 어떤 내용적인 규제 개혁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공공영역과 만나는 그런 지점에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접근하게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영역의 규제 개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법적인 차원에서의 노력도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정부 예산안 발표되고 또 이후에 저희가 정부 예산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도 하고 당사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최근에 만난 분들 중에 사실 저도 몰랐던 영역이 있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가 되게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장철민 위원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회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잘 되더라고요. 실제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의 우리 기업인들이—거기 직방도 있고 토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유니콘, 예비 유니콘, 성공한 기업들도 꽤 많은데—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만큼 성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기여해야 된다, 대한민국에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네들끼리 일종의 약간 자체 펀드 같은 것들도 조성해서 후배들을 돕는 어떤 이런 투자 공급도 만

들고 그런 어떤 네트워크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벤처 생태계나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어떤 예산의 조정이나 이런 어떤 전담기관의 조정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런 종류의 레거시, 자발적인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최근에 했는데 장관으로서 앞으로 일하시게 된다면 이런 어떤 자생적인 생태계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의 예산이나 지금의 정책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자생적인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앞으로 이해하고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후보자님, 답변 간단하게 하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청년창업사관학교, 청창사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예산이 삭감되고 기존에 있었던 공간은 재도전학교로 사용된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 변경이 사실 발표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계기로 해서 청창사에 자발적인 선후배 간의 네트워크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끌어 주고 밀어 주고 하는 창업가들의 그런 네트워크가 사라진다고 하면 예산 1000억 원을 없애는 것보다 더 큰 사회적 자원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창사 예산이 감액되고 계획이 전환된 배경을 보니까 그 공간에 대한 입주율, 입주 신청률이 8%대로 낮아져서 그랬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그 입주 공간은 재도전성공학교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작은 명맥이라도 유지하면서 그 네트워크를 이어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질의의 마지막입니다.

구자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구미 출신 구자근입니다.

장관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감사합니다.

○구자근 위원 지명 축하드립니다.

장관후보자 지명되시고 나서 비거주 주택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오전 위원님 질의에 후보자 답변이 ‘매각하지 않아서 실현된 이익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실현된 이익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아직 매각 차익을 얻은 것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국민들의 부동산 감정하고 장관님께서 지금 공직 후보자로서 그런 답변의 적절성,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

여깁니다.

물론 후보자께서 개인 사정이 있듯이 국민 개개인도 다 사정이 있을 겁니다, 이게 부의…… 불법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근거당권 설정해 주고 그렇게 거래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구자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아니면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는 그 감정 속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고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피로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장관후보자로서 개인 사정을 이야기하는 게 이중적인 잣대로 비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직 윤리 자격 가지면서 언행에 조금 더 신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그 부분은 더 주의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리고 오투앤컴퍼니 관련해서 지금 그 회사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최근에는 사실 거래관계를 하지 않아서 현황을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게 공실이고 사람도 살지 않고 그런 환경인 것 아니잖아요. 주소만 놔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구자근 위원 일단 제가 진행을 할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구자근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사무실도 차려지지 않은 곳인데 실질적으로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의원실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성과, 과업 지시들에 다 성과를 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 않았나요?

계약을 언제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계약을 2023년 9월인가에 했던 것 같습니다. 8월, 9월……

○구자근 위원 아닌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자료 제출한 것은 24년 7월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두 번의 계약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계약이 23년 말입니다. 23년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9월입니다, 2023년 9월.

○구자근 위원 통상적으로 23년에 법인을 하고 주소지는 그대로 두고 서울로 옮겨서 지금 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본인의 해명에 따르면……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때도 서울 용산의 사무실에 있었다고……

○구자근 위원 이전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법인 주소를 옮기는 데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영세하거나 허약한 업체인데 장관후보자께서 답변하실 때는 ‘업력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 법인 자체는 신생이 맞는데 그 해당 컨설턴트는 다른 법인의 이름으로 한 20년 정도 활동해 온, 나름대로는 여러 위원님들을 자문했던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새로운 법인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때 제가 조금 더 정확히 챙겼어야 됐는데……

○구자근 위원 그 법인에서 해명한 것을 보면 이전비용이 많이 들어서 법인을 이전하지 않았다는데 그러면 최소한 보통 법인 개인적으로 1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전비용이 한 100만 원 전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해명력이 약한 업체의 업력이 강하다 해서 의원님 외에 여러 분들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맡기셨고 공실 상태인 그런 허술한 업체에 그렇게 갔을까, 7000만 원 정치자금으로 국민세금으로 간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그 부분은 당시에는 사실 법인의 외피나 등기 내용까지 제가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주의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리고 오전에 우리 당 위원 질문 속에서 기후대응 관련해서 시대적 흐름이고 글로벌 흐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구자근 위원 원전보다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큰 흐름은 재생에너지로 가는 게, 그런 측면이 맞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근 위원 후보자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기후 관련해서 계시고 또 지금 기후에너지 환노위에 계시다가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구자근 위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에너지 관련해서도 지금 기후에너지로, 국내 에너지는 그쪽으로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저는 탈원전 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후보자께서도 계속 탈원전 입장을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저는 사실 탈원전보다는 탈석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구자근 위원 후보자님, 제가 여기 보니까 ‘원전은 우리가 가야 할 미래라고 보지 않는다. 굳이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드는 원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원전은 사양산업이고 재생에너지는 엄청나게 핫한 산업이다. 우월한 전원이 있는데 원전을 굳이 새로 지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얼핏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만은 아니고 후보자께서는 계속해서 탈원전 측면의 주장을 계속해 오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광주에 메가 프로젝트 하면서 재생에너지만으로 반도체 가능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현재 기준으로는 그 계획은 재생에너지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구자근 위원 이 정부에서, 민주당 쪽에서 탈원전 주구장창 주장했지 않습니까?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풍력 포함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재생에너지만으로 광주 반도체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100%는 현재로서는 어려운데……

○구자근 위원 현재로서는 100% 못 합니다. 원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말을 바꾸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로남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여러 가지 정책적 바꿈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곤란해질 겁니다, 소신과 배치되는 다른 정책적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원전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 피력해 왔던 입장은 기존에 존재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을 높이면서 수명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신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자제하고 다른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몇 차례 표명한 적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원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시간 넣어 주세요.

후보자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씀, 모두발언 있잖아요. 저는 아주 의미 있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요, ‘우리 사회는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사회인가 아니면 배척하는 사회인가. 혁신수용적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는 자영업의 구조적 환경을 그대로 둔 채 소상공인에게 더 노력하고 더 혁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이런 것을 늘 질문을 해 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위원장 김성원 그것에 대한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저는 우리 사회가 혁신수용적 사회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니콘을 많이 배출하고 또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왔으면 하고 바라지만 사실 우버나 타다 같은 작은 혁신도 수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그런 변화에 대해 조금 더 개방된 마음을 가져야 새로운 것들이 싹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과 또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재경위에서 활동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소상공인 너무 어렵고 중요한데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너무나 구조적이어서 사실 단번에 무언가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용구조 개선에 대한 지표화와 정책체계와 로드맵 수립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거라도 빠르게 규명하고 작은 실천이라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아까 후보자께서 예를 들었던 비용구조에 대한 예 있지 않습니까? 그 예는 조금 잘못 선정된 예예요. 아까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상당히 잘 되는 1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예를 가지고 표현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후보자께서 좀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두 번째는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조금 만들 그런 대략적인 프레임을 갖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최근에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금이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기존 제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진입규제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진입규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혁신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너무 제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규제개혁부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그런 규제 문제를 앞장서서 부딪쳐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노력하는 만큼 결실을 얻는 사회가 현재는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을 더 헤아리면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막연하지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해 가지고, 후보자께서 건전한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의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사회·환경·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순서에 따른 주질의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먼저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진 위원 아까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중소벤처부에 관련된 기업의 경험도 없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련된 법안도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 국회 입성 때 환경 쪽에 특화된 변호사로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면서 이 다섯 가지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탈석탄법,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중단 등 어떻게 보면 대부분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규제법안에 가까운 법들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속했던 이 법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같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같습니다.

○최수진 위원 철회하실 생각 없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저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넘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자동차기업들 그리고 부수된 협력업체들이 미래에도 계속 경쟁력을 가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가 한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정확한 개수는 알지 못합니다.

○최수진 위원 한 2만 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내연기관에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한 얼마나 될 것 같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렇지요, 최소 20%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럼 그 기관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들은 있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유럽의 경우에도 2035년으로 정책이 설정되어 있는데 먼저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지금 축소되고 있는 위축되고 있는 산업의 분들이 새로운 산업에 옮겨 가서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재교육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사업 전환 예산 지원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막연한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 기업에서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업들은 현재도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2035년이라고 못 박은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기업들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넘어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의 실현 가능한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앞으로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의 전환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무역보험법 내셨더라고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석탄 발전사업 금융 지원을 막는 법안을 내서 실제로 중소기업의 해외 수주 기반까지 힘들게 했고 중국기업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전면 금지를 하고 나서 기후솔루션, 아까 윤한홍 위원께서 지적하신 기후솔루션의 KR 펀드기금이 한 5억 정도가 추가 입금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저는 그걸 질문을 한번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KR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제가 이번에 처음 들은 명칭이어서 전혀 그 관계는 알지 못합니다.

○최수진 위원 전면 금지하고 펀드를 받았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연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제가 발의한 법은 사실 통과되지도 않았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원전 사고 발생국이나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 국가의 수산물과 가공품 수입을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법안을 보면, 후쿠시마 주변에 이미 8개 현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법이 있고요 실제로 해수부에서 계속 방사능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 전체를 수입을 방지, 그러니까 못 하게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소상공인을 저는 죽이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식약처가 이걸 과도한 조치다, 또 우리나라 최대의 소상공인 외식업중앙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상당한 타격이다 하면서 결사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방사능 이상이 제로였습니다. 오히려 국민 혈세가 800억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자의 지금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제가 발의했던 법의 정확한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정부가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당시에 나왔었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서 더 우려가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부가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후쿠시마 인근 현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재량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 법을 발의할 당시에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 78%가 걱정하고 또 횃집이나 수산물 판매가 급감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정치인분들이 횃집에 가서 회를 먹는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조금 잠재우기 위한 부분……

○최수진 위원 23년도였어요, 23년도. 그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혜련 위원 제가 질의할 때마다 앞 분들이 해서 꼭 제가 질의한 내용을 못 하게 하시는 게 있네요. 어쨌든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아까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못 드렸어요,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감사합니다.

○백혜련 위원 지명이 됐고 저는 이제 곧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차규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사실 저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진짜 벤처라는 부분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충돌하는 부분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벤처기업은 혁신과 도전의 아이콘이고 위험성이 있더라도 그리고 또 규제를 풀어 줘야 되는 파트라고 보이고요.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규제를 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예전부터 갈등요인으로 했던 게 주말에 하는 큰 대형마트와 또 이런 자영업자들, 전통시장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런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욕구가 충돌하는 지점들을 잘 조율하면서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저도 사실 이번에 많은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그런 질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처인데다가 그 대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생각과 입장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충돌이나 그럴 때 입장을 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시대가 빠르게 변화…… 규제가 처음부터 나쁜 규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대가 변화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불합리한 규제 또는 나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또 사회적 약자, 거기에서 이탈되거나 낙오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유니콘팜 활동도 하시고 이런 벤처기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한 전문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본인이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의원 활동을 하시면서도 멀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그리고 정말로 험난한 이 세계의 경제질서 속에서 좀 더 모험자본을 키우고 이 벤처업계를 키우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뭐라고 생각하세요,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벤처기업을 키울 때 있어서요?

○백혜련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충분한 자본이 적시에 조달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양한 사업들이 진입규제에 막히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번에 모두의 창업에서 또 우리가 성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듯이 그런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문화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인재, 사람의 문제 그다음에 규제 문제 그리고 투자 문제 이런 세 가지가 제일 어떤 핵심 요소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투자가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을 바라보는 데에서는 투자의 개념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또 은행에 돈을 끌어오는 그런 관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더 은행은 돈을 본질적으로 안전하게 굴리는 거, 한마디로 그것이 중요한 거고.

벤처투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험성이 중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술보증기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하고 비교해 보시고.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기본재산도 훨씬 적고 보증잔액도 크거든요. 이것은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신보와 기보의 역할이라거나 통합 논의까지 최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정부의 개혁방안에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역할 정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후보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애 많이 쓰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감사합니다.

○오세희 위원 제가 아주 가끔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지원이 조금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왜 우리 정부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되는가?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이라는 과제 앞에는, 지역상권 인프라가 소멸되었을 때 지역소멸이 가속화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권 공실이 이어졌을 때 지역경제가 과연 괜찮을까? 무너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 지원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감하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공감합니다.

○오세희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공공배달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650억 원을 투입했고 올해에 1240억에 대한 상생앱 지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얼마나 현장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급박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예산을 상생앱 쿠폰보다는, 소비자가 알고 유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알고 유입해야 되는 인식을 시키는 데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쿠폰을 순간에 뿌리는 것보다.

어찌 보면 배달앱은 엄격하게 민간의 영역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현재 배달앱은 너무

도 자영업자들 아픈 부분인데 민간기업은 어떻습니까?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철저한 비즈니스, 기획력, 마케팅 그렇게 접근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쿠폰을 일시적으로 뿌려 가지고 그게 되지가 않아요. 경쟁 상대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상생앱 쿠폰 사업은 적절치 않다. 왜? 단발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일시적.

그렇다고 정부가 영업사원으로 뿔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은 직원들이 일반 업무, 관리자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치열한 영업기획을 갖고 있는 민간 영역에 정부가 공공사업으로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중재자 그런 역할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동의합니다.

배달앱과 관련해서 혹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된다면, 작년에 650억 예산이 편성될 때가 예결위 간사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상생배달앱 중의 하나인 ‘땡겨요’를 계속 써 보고 있는데 사실 소비자들이 왜 안 쓰는지 저는 이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배달앱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그 경험이…… 불편합니다, 도착 알림도, 푸시도 뜨지 않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 개선이 되지 않으면 쿠폰 투입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희 위원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오세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일감몰아주기, 반복 수주.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T에 보면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표준협회, 능률협회, 생산성본부 이렇게 3개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지금 74%의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러면 왜 여기가 반복 수주를 그렇게 하게 되냐? 여기는 뭐냐 하면 실적증명서, 유사사업 수행 실적, 두 가지예요, 포인트가.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사업 수행 경험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지요. 다만 그런 구조가 반복되면 계속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사업을 재위탁, 그래서 그분들은 뭐냐 하면 수주를 해서 계속 재위탁, 하청, 외주 영업을 하게 됩니다. 저한테도 많이 와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한테 몇 %를 떼고 하청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런 용역사업은 수주기관이 수주를 했으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청의 하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정 기관에 일감이 반복적으로 몰리는 구조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유니콘기업, 청년들이 또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따서 수행 실적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가는 건 아니다. 과거 수주 실적이 다음의 수주 경쟁력 이런 게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소진공 위탁사업을 3개 기관이 74%나 가져가는 것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데 장벽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에 그것을 금지해서 본인들이 수행해야 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인 수주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개선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알겠습니다. 꼭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후보자님, 지금 오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배달앱 있잖아요, 상생 배달앱 땡겨요 같은 경우 거의 시장에서는 역할을 아마 못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혈세가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장관 되시면 한번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5000원 쿠폰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그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준 위원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혹시 북한 갔다 온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아니요, 없습니다.

○우재준 위원 정말 없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진짜 없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런데 통일부에 저희가 인사청문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회신이 왔냐면 ‘방북 허가 및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내역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왔어요. 이런 것을 제공 동의하지 않은 분은 사실 몇 명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마 바빠서 다 못 챙겨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따 후보자님 말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혹시 권익위랑 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대강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보통 보면 공무원들의 부당행위, 부패, 비리 같은 것들 신고받고 또 인권침해, 차별행위 이런 부분들을 신고받는 기관이지요. 적절한 조치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사청문회에 혹시 권익위와 인권위에 후보자 관련해서 어떤 신고 내역이 있는지를 봤는데 전부 다 부동의 처리하셨어요. 후보자 측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미동의함’ 다 이렇게 처리해서 자료가 한 개도 안 왔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수백 개의 항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인사청문회의 직전 후보자님이나 이런 선례에 따랐다고 알고 있었는데 통일부나 권익위, 인권위 사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그 부분 동의서를 제출해서 오늘 중에 혹시 제출될 수……

○우재준 위원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따로 제보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

고 평소에 후보자 인품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뒤통수에서 동의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죽,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 미동의를 한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미동의를 한 내역을 전부 다 달라고 하니깐 그것도 알려 주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회신이 또 왔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물론 후보자가 바쁘시고 하니깐 못 챙긴 부분이 있지만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 그리고 오전 중에 존경하는 조지연 위원께서 물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좀, 이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싶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연임 개헌 관련된 부분이에요. 연임 개헌 관련 부분에서 후보자께서 오전에 정치적 논란이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해서 현행 헌법상 연임 개헌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지금 국민들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벌써 여러 차례 그것은 불가능하고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재준 위원 대통령이 어떻게 말했는지 제가 PPT를 한번 띄워 드릴게요.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 왔습니다.

혹시 PPT 좀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PPT가 안 돼서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읽어 드릴게요.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프랑스에서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그래서 안 할 거야’라는 말은 안 하세요. 그다음에 그 전에도 보면 ‘연임 개헌, 야당이 저지선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냐’, 그러면 일단 시도는 할 건가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들어요.

저는 연임 개헌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표결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야당이 지금 한 110석에서 그 근방에 의석 수가 있으니까 그 반대가 있으면 통과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180명이 찬성을 누르는 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 맞아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여전히 추진한다는 그런 생각이 만약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야당에서의 어떤 이탈자를 계속 노리고 있지 않을까, 색출하려고, 어떻게 포섭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그런 불안감이 있으면, 그러면 이 개헌에 대한 논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후보자께서는 사실은 지금 단지 1명의 그냥 중기벤처장관일 뿐만 아니라 젊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에서 미래를 이끌어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는 개헌도 하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 어떻게 보면 고민해야 되는 영역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도 같이 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의 불안함에 대해서도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있는 국무위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저는 이 부분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국민들이 이런 부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헌법 128조가 있어도 거기의 어떤 법망의 틈새를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할지 아닐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해소시켜 줘시다’라는 설득을 하셔야지,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도대체 정치적 논란이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제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도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취지는 대통령께서 그런 연임 개헌을, 본인의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라고 한번도 의사 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해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게 논란이 되는 것이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후보자의 취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승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은 8개월 만에 지난해의 연간 실적을 넘어 사상 첫 1조 달러를 바라보고 있고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약 3.3%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은 여전히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임은 거시지표의 성공을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현장이 체감하는 성장으로 확산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수출 호조의 낙수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내수, 소상공인 부분의 성장을 체감할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신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역대급 수출이 증가했는데 중소기업 수출의 비중은 17%에서 12%로 비중이 오히려 축소하는 상황이고 실제 그런 낙수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BSI 경기지표는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현장에서는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성장의 과실이 저변에까지 넓게 퍼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조가 투입되는 그런 3대 메가프로젝트라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앵커 대기업들의 역할은 지금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이나 지역경제는 어떻게 거기에 따라가면서 과실과 온기를 같이 누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논의하지 않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성장 전략에서 중소·벤처 그리고 소상공인이 누락되지 않게 하는 그 고민을 함께 전략에 담아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승 위원 지금 우리 경제가 외형적으로는 커졌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6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리고 더구나 어느 대기업들 중에서는 오히려 벤더업체들 임금까지도 서로 통제하는 현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임금 격차에 대해서 해소할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사실 단순히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기업 위주로 짜여져 있는 산업구조라거나 그리고 어떤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점일 텐데요. 그 부분은 저 혼자만의 고민보다는 관계 부처 장관들과 조금 더 폭넓은 논의를 하고 고민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목소리를 더 크게 내셔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반도체 기업이 호황이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엄청나게 받는 데도 있고 요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그쪽 근로자들만의 이득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소기업부장관으로서 크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런 상생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강제성이나 효과성 있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상생지수를 발표한다거나 공표하고 이런 간접적인 수단들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이행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리고 중기부는 수많은 정책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제는 준비 역량이 앞선 수도권이 유리한 구조에서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지원에서도 밀려나는 역진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산업통상부 공모사업 352건을 전부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예산 비중은 약 13.8%에 불과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 기준에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요소가 정량적 지표로 반영돼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없다면 가점제 도입과 취약지역 별도 트랙 신설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전반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가령 팁스(TIPS) 대상 회사 선정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비수도권 기업을 절반 이상 선정하게 하겠다고 하는 정부 방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팁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공모사업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 원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한홍 위원 수고하십니다, 후보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감사합니다.

○윤한홍 위원 청와대에서 후보자 내정 발표할 때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적극 나섰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윤한홍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한 두세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상법 3차 개정안 날치기로 밀어붙여 가지고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속에 중소·벤처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자사주 강제 소각입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윤한홍 위원 자사주 강제 소각에 대해서 중소기업협회라든지 대한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에서 중소기업은 자사주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강제 소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또 벤처기업협회에서도 자사주 소각 예외규정을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 달라 이런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윤한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법 개정안을 후보가 앞장서서 밀어붙인 사람 중의 한 명인데 만약에 장관이 되면 중소벤처기업협회를 만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윤한홍 위원 거기서 또 이렇게 건의를 하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이번에도 사실 건의를 받았습시다, 만났을 때.

○윤한홍 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에는 이미 사실 예외가 폭넓게 다뤄져 있는데요.

○윤한홍 위원 더 이상 안 된다고 답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벤처기업……

○윤한홍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면요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에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그러면 그건 내년 9월이예요. 신규 자사주는 1년입니다. 내년 3월 되면 강제로 매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중소벤처기업협회에서는 장관에게 하소연할 시간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제 질문 끝나고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알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2018년 대비 35% 감축안을 냈거든요, 2030년까지.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후보가 작년 8월 달에 대표발의했습니다. 그 발의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더 강하게 돼 있어요. 2018년 대비해서 2035년에 61%, 2040년에는 80%, 2045년에는 90% 감축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중소 제조기업 500곳 중에서 92.8%가 기한 내에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응답한 기업의 85%가 추가 비용 때문에 이거를 양해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어떻게 발언했는지를 보니까 정부가 2035년 감축 하한치를 50~

53%로 발표를 하니까 ‘역대 목표 중에 가장 비겁한 숫자다’, 그다음에 예결위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지겹도록 들어온 레퍼토리다’ 하면서 온실 감축 목표를,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을 완전히 외면합니다. 중소기업들이 하는 이 소리는 정말 지겹도록 들어온 레퍼토리다 하고 단칼에…… 이 발언을 했어요, 우리 후보가.

그러면 장관이 되면 당연히 이 중소기업협회를 방문하고 같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면박을 주실 건지 그것도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 끝나고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윤한홍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할 때 민주당에서 굉장한 큰 괴담을 퍼뜨려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우물에 독극물 푸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담을 퍼뜨린 진원지가 민주당인데 우리 후보도 그 당시에 앞장을 섰었습니다. 후보가 1일 1후쿠시마 브리핑 캠페인을 진행을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윤한홍 위원 그때 수산시장이 장사가 안 됐어요.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또 장관이 되고 나면 이 소상공인들 수산시장도 한번 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 보겠지요? 또 이번 추석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 볼 거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윤한홍 위원 그 당시에 이 괴담을 통해서, 지금도 똑같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때 이 소상공인들이 보았던 피해, 이제 중기부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입장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분들을 다독겨 주실 건지, 세 가지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의 소각기한이 남아 있어서 제도개선의 시간은 있습니다만 현재 법에 따르더라도 임직원 보상을 위한 자사주 보유나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데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보상 같은 것들을 위해서 자사주를 장기 보유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이 예외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외를 넓히는 그런 논의도 충분히 열어 놓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해서는 사실 여야 합의로 그 내용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려한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 점을 다 같이 공감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당장의 감축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걸 비용으로, 부담으로 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선도하는 것이 더 이롭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저는 괴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준위 사용후

핵연료가 담겨 있던 수조의 사고수를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방류한 역사상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30년간 앞으로 방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누적되었을 때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국민들이 많이 우려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한홍 위원** 잠깐만요.

지금도 똑같은 오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독극물이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수산물시장 방문해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십시오. 장관이 되시고 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30년간 누적 방류로 인해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윤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하고 똑같은 오염수가 나오고 있는데 장관이 되고 나서 수산물시장을 가셔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렇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더 면밀하게 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검역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원** 장관 되시면 나중에 마산 어시장 한번 가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 임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문영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청년 실업률은 6.1%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작년에 신규 창업기업 수는 113만이 넘었고요, 올해 상반기 신규 창업기업 수는 56만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창업이 많은 것은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창업하는 것도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의 창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창업기업들의 1년 생존율은 보통 64%, 5년 생존율은 36%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이는 창업기업 10곳 중에서 6곳 이상이 5년 이내에 생존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 과정 자체 아니면 창업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너무 용이하기 때문에 교육 의무라거나 그런 절차적인 허들을 뒤편에 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 이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문영 위원** 창업이 이벤트로 여겨지지 않고 실질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한 줄로 창업할 수 있다’ 이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의 창업에 대한 홍보 문구에서 ‘아이디어 한 줄로 창업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후보자는 창업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저는 사실 비영리 환경단체를 만들었던 게 비영리 스타트업을 만들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공유오피스에 책상 두 개를 얻어서……

○임문영 위원 비영리하고 창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고요. 창업은 먹고살기 위해서 또 성장하기 위해서 목표를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창업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제일 먼저 연락이 오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보통 홈페이지 제작 업체하고요 세무 기장하는 데서 연락이 옵니다. 그만큼 창업을 하면 도와주겠다는 데보다는 뭔가 수수료를 받거나 창업하는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후보자님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는 창업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말 정도는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히 창업의 문제 중의 하나는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창업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현장을 경험할 기회가 없다는 거지요.

특히 청년들은 취업을 할 때 디지털 회사나 AI 기업이나 이런 첨단기업들에 가서 취업하고 싶어 하지 소음과 매연, 진동이 있는 그런 공장에 가서 창업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결국 제조업의 성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50대·60대의 암묵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50대·60대의 암묵지를 젊은 청년들이 이어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혹시 FDE에 대해서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암묵지를 축적하는, 그런 모델화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임문영 위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만든 모델 중의 하나인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아, 엔지니어.

○임문영 위원 현장 배치 엔지니어라고 해서 전문가들을 현장에 보내서 현장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들어 봤습니다.

○임문영 위원 저는 이 FDE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데 중기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팔란티어에서 실제로 전문 엔지니어들을 현장에 파견해서 현장에 맞는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 그런 사례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어떤 법에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문영 위원 좀 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미 FDE 채용공고는 5230%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회사조차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FDE 사업본부를 만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FDE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27년 예산안에 보면 제조 펠로우 양성사업 같은 것들이 아마 조금 비슷한 유형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FDE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보고 그에 맞는 제도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문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아닙니다.

○조지연 위원 오전에 직언, 대통령께 정말 설득을 해서라도 직언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국무위원이 되시면 연임 개헌 안 된다, 본인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 안 된다 꼭 직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직언 꼭 하십시오.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조지연 위원 합리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전의 답변에 ‘지식산업에 한해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꼭 특정해서 지식산업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조지연 위원 제가 왜냐하면, 중기업계의 현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기에 소속된 임금근로자의 부업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2020년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2021년도에 본격화가 됐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보다 2025년도에 불과 5년 사이에 부업하시는 임금근로자들이 37.1%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기업계는 지금 인력난에 그리고 납기일 맞추기 위해서 정말 그 고충이 있고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사실 있습니다. 부업까지 하는 정도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세요? 중기업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런데 이게 사실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조지연 위원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일·가정 양립과 어떤 건강이나 소득도……

○조지연 위원 저도 워라밸 중요시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그런 측면에서 근로자가 어떤 대등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근로시간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 가능한 그런 대등한 관계일 때 그런 예외 같은 것들이 더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연 위원 고용부와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당연히 또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조지연 위원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 95번이 뭘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95번은 모르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해 가지고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는 게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워라밸+4.5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 얼마큼 이 기업들이 원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중소기업 업체의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주 4.5일제 되면 중소기업들 다 문 닫으라는 얘기다라고 했는데, 장관후보자는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제도적으로 강제할 상황은 현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간의 어떤 합의에 따라서……

○조지연 위원 일을 죽도록 하자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중기업체가 처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동집약형이 굉장히 많은데, 노동력 투입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다른 뭔가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중기에서 하는 AX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제 조건들이 잘 갖춰질 때 가능한 얘기, 그리고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기업계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현재까지는 정부의 접근도 이것을 강제하기보다는 시범사업으로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에 보조금,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중소기업계에 예측가능성을 꼭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조지연 위원 그리고 가업상속에 대한, 후보자는 편견이 있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편견까지 가지고 있지는……

○조지연 위원 왜냐하면 2023년 12월에 본회의장에서의 상속세법, 그리고 연부연납 하는 거를 조금 완화해 주는 겁니다. 기간을 확대해 주는 그런 내용의 상속세법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공제 금액을 확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셨어요, 표결을. 반대 표결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게 몇 년도인가요?

○조지연 위원 2023년 12월에도 반대 표결하셨고 공제 금액을 확대해 주는 내용의 2024년 12월의 상속세법에 대해서도 반대 표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기업계가 사실 특정인의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승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10년 내에 소멸하는 기업 업체 수가, 사업자 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5만 5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를 잃게 될 실업률, 실직자 수 이런 거는 약 317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그게 중기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도 그만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제 금액은 확대했는데 가업의 어떤 요건을 엄격화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 혜택은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세제개편안이 중기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두고 보면 가업 승계 문제는 사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기업이 문 닫느냐 계속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부랑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국무위원이 되신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그 이천이십……

○위원장 김성원 짧게 답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23년 11월 반대 표결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조지연 위원 2023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걸 확인한 다음에 혹시 다음번 질의할 때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요.

그리고 가업 승계 이번에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 관련해서는 사실 어떤 토지를 상속하는 것과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장업으로 가업 승계하는 거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업종이나 업태 같은 것들을 좁게 줄이는 부분이 일정 부분은 합리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연 위원 업종 변경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가업 요건에 대한 부분……

○위원장 김성원 조지연 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봉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홈플러스가 경영 위기를 겪고 있고 9월 2일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점해 있던 협력업체 약 770개 또 입점업체 1470개, 그중에 한 80% 이상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4400억 원 정도의 지원 대책도 마련해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의 금리도 좀 낮춰 주고 한도도 늘려 주고 이렇게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막상 실적을 보니까 한 20%대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됐고 그래서 이게 좀 적극적으로……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지원이 잘 안 된다.

이것이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금리라든가 대출 요건 이런 것이 이분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완화되지도 않고 또 이것이 빚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 해서 대출을 해 주는 방식밖에 지원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건 그 외에 더 다양한 새로운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지원 제도를 좀 더 한번 들여다보시고 실제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지금 방금 말씀하신 4400억이 용자를 해 주는 방식의 유동성 지원인데 아무래도 지금 당장 어렵고 사업이 폐점되는 상황에서 빚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아마도 그런 용자 소진이 미진한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유동성 지원 또 폐업에 대한 비용 지원, 그리고 지금 홈플러스는 폐업했는데 소상공인은 그렇게 섬처럼 남아서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그런 이전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두루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부가 희망리턴패키지 원래 하던 사업에서 내년 예산에 홈플러스 소상공인 협력업체에 대한 별도 트랙을 만들어서 별도 지원을 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아직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올해 편성되어 있는 이런 자금들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봉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폐점 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과 현재 영업을 하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분리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계속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송재봉 위원 또 한 가지는 저는 중기부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라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송재봉 위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창업도시를 지정하고 거기를 육성함으로 해서 지역의 산업경쟁력도 키우고 균형발전도 이루겠다고 하는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대전·대구·광주·울산 네 곳은 이미 선정이 됐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과기원이 있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자동 선정이 됐더라고요, 경쟁 없이. 당연히 기반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6개 도시를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도록 구조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창업기업 수라든가 벤처투자, R&D 사업화, 지역 대학의 역량, 산업 기반 등등을 종합평가해서 이곳을 지원하겠다고, 앞에는 그냥 지원해 주고 여기는 경쟁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4개의 광역자치단체 중에 10개는 지정을 받는데 또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시켜서 나머지 4개는 해제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역의 어떤 역량도 있지만 의지를 통해서 앞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그 선정하는 방식이 늘 지자체를 경쟁시키고 경쟁시키면 당연히 기반이 더 좋은 데에 기회가 더 많이 가고 또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약한 데는 오히려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그 4개만 떨어뜨리는 방식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오히려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되 그 지역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 다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 4개에서 6개, 총 10개의 창업도시가 된 경위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소외되는 지역이 광역 단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부산 동래구 서지영입니다.

후보자님, 하루 동안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감사합니다.

○서지영 위원 이번에 개각을 보면서 여섯 분을 새롭게 지명하셨는데 그중에 세 분이 현직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용혜인 의원의,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용혜인 의원의 사퇴를 겪으면서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 문제가 정치권의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우리 법체계에서는 헌법상으로서나 국회법상의 의원 겸직, 내각제적 요소가 어느 정도 스며들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새롭게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데 마침 그래서 살펴보니……

PPT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정부의 의원 겸직 장관 임명 현황을 쭉 살펴보면 과거의 여러 정부들에 비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겸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PPT가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세 분이나 일단은 지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비율이 다른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지금 장관과 의원의 겸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지금 본인의 문제가 되었지 않을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저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 헌법상의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각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한 헌법 구조인데요. 그것의 장단점이 있고 분명히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전념이라거나 또는 삼권분립의 엄결성이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단점이 있지만 또 장점이 있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하고 의……

○서지영 위원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과서상으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스며들어 있는 거는 역사적인 산물인 측면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롭게 조명해야 된다는 의견들은 많습니다. 어쨌건 의회는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과연 견제자의 역할과 그다음에 행정부의 역할을 동시에 이것이 양립할 수 있는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입각을 하셔서 가지고 최근에 이분들이 표결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셨어요. 과거에 보면 정세균 총리와 추미애 장관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때 출석해서 찬성표를 던지셨고 작년에 노란봉투법 표결 당시에도 정성호·안규백·윤호중·김성환·전재수 장관도 의원 신분으로 본회의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물론 대통

령을 보좌하는 장관의 입장에서 정부 여당이 펼치는 정책들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주 압권이었던 거는 김민석 총리였습니다.

혹시 사진 있나요?

총리임명동의안에, 자신의 총리임명동의안에 직접 참석하셔서 표결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총리후보자로서의 자세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지 그 둘 사이에서 이것은 총리후보자로서의 태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 다 참여하셔서 표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장관 직무에 더 몰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지영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양립할 수 있는 게 저는 장관의 직위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장관의 지위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와 여러 가지 공방은 있습니다마는 전채수 부산시장의 경우에도 국무위원 4개월 재직했을 때의 자신의 여러 가지 활동을 후보시절에 굉장히 많은 선거에 활용하고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여러 가지 벤처기업도 많고 지금 후보자 지역에도 여러 가지 소상공인 업체라든지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럴 때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후보자께서 굉장히 유념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혹시 저 추가로 1분만 더……

○위원장 김성원 예, 그러십시오.

1분 더 드리세요.

○서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과거에 경실련의 질의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각제에,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내각을 인선할 때 국회의원을 많이 지명하셨지요. 굉장히 본인의 생각과 실질적으로 인사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충되는 국면이라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해 왔다는 점에서 내각제적 요소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까지 깊이 고민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서지영 위원 본인의 일이 되셨으니 지금부터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김종민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일자리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중소기업부의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일자리 문제다 이 문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 꼭 기억을 좀 해 주시고.

대안으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 볼 테니까 장관 되시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지능산업 일자리를 확대하자, 지능산업 일자리를 키워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거냐 소버린 AI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들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퍼지컬 AI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데이터센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김종민 위원** 사실 이런 게 다 약간 세레 요한 같은 겁니다. 이런 게 콕 찔려서 인프라가 깔리면 그다음에 뭐가 지나갈 거냐, 그다음에 도메인 AI나 퍼지컬 AI가 거기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넷스케이프라든가 이런 브라우저 같은 이런 비즈니스가 있었잖아요. 그게 익스플로어로 다 통폐합이 되고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애플 이런…… 그다음에 메타 이런 서비스웨어들이 시장을 주도하게 된 빅테크가 됐잖아요.

아마 AI도 비슷하게 될 거다. 그러면 결국 이런 도메인 AI 분야나 퍼지컬 AI 분야가 앞으로 AI 산업, 이 지능 산업에 주역들이 될 겁니다. 이게 다 데이터로 먹고사는 산업이예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김종민 위원** 이 데이터를 누가 좌우할 거냐, 지금 파운데이션 데이터는 소셜 플랫폼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중국이 다 지금 장악을 해 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지금 그런 소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거 파운데이션을 해도 방어적으로 하는 거지 여기서 승부를 내기는 어렵지요. 앞으로 이 도메인 AI 분야, 예를 들어서 변호사시니까 로톡인가요, 뭐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김종민 위원** 그거 지금 챗GPT보다 그게 더 정확하잖아요. 그거 쓰는 사람 많지요, 지금 변호사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판례 검색……

○**김종민 위원**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이런 식의 각 분야별 이런 AI들이, 데이터 산업들이 육성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쓸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을 하고 또 실제 중소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 조달하고, 이거 할 데가…… 이거 중기부에서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분야에 거브테크라고 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거브테크.

(영상자료를 보며)

사람들이 거브테크 그러면 정부24, 전자정부 이런 게 다 거브테크 산업인데 에스토니

아 이런 나라들 말은 많이 들어 봤지요, 싱가포르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그런데 이거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워싱턴DC하고 베를린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띄워 보세요, 한번.

G테크의 규모가 1600조입니다. 반도체보다 더 커요. 성장률이 반도체 2배입니다. 앞으로 이 산업이 엄청난 산업인데, 대한민국이 전자정부 경쟁력이 세계 탑티어입니다. 지금 미국·중국 빼고 나머지 글로벌 사우스라는 나라들은 전자정부 관련된 거 하면 한국하고 하려고 그래요. 엄청난 잠재력이지요.

이 포텐셜을 거브테크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과기부가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R&D 때문에 하는 겁니다, IT·R&D가 과기부 일이니까. 중기부 일이에요, 이게. 거브테크는 거의 대부분이 다 중소기업입니다.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면 이 거브테크 산업을 엄청나게 육성을 해야 되고 이게 결국은 데이터 뉴딜사업입니다. 이 데이터 뉴딜은 시장에 맡겨 놔서는 안 돼요. 중기부가 국가예산, 지금 150조 국민성장펀드 만든다며요. 그중에서 제가 말한 50조는 중기부한테 달라고 그래요. 중기부가 이 일자리 사업을 우리가 전담해서 하겠다, 루즈벨트 수준으로 하자. 그렇게 안 하면 이재명 정부고 다음 정부고 다 지지율 10%대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문제 해결 못 하면 어느 정부도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습니다.

정말로 결정적 5년이거든요, 앞으로. 이 대전환기의 결정적 5년에 이 준비를 안 해 놓으면, 이거를 그냥 시장에 맡겨 두고 우리 옛날에 하던 정책한다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부장관 되시면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지능산업 일자리, 데이터 뉴딜, 거브테크 이 용어들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거 과기부에서 하는 거, 그거는 R&D예요. 실제 시장을 만들어 내는 거는, 마중물은 중기부에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거 꼭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1분만 더 주시면……

○위원장 김성원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 시장이나 소셜벤처를 키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시장에서 서로 이윤동기에 의한 그런 시장의 교환 말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 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해집니다. 왜? 기존에 이윤 관련된 일은 대개 로봇이 많이 할 거니까.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취업유발계수가 엄청 높아요. 협동조합 하나가 38명입니다. 아까 얘기한 반도체는 2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 시장 소셜벤처를 엄청나게 늘려야 된다. 이것도 역시 중기부가…… 이거 중기부 업무잖아요, 소셜벤처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그거는 업무입니다.

○김종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중구조 문제, 양극화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 차원의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가서 대통령 설득하고 장관들 설득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격차 80% 수준까지 어떻게 만들 거냐 국가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고요.

자산도 지금 청년내일채움이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약계좌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것 다 옛날의 재형저축 문제의식이에요. 저축해서 이자로 소득을 올리는 용도거든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투자를……

○김종민 위원 지금 다 자산소득으로 돈을 버는 시대예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 자산소득의 길을 열어 줘야 돼요. 청년들한테 그 길을 열어 주는 것, 이것 국무위원으로서 연구해서 국무회의에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무슨 저축계좌 더 만들어 주고 거기엔 돈 보태 주고 하지 말고 한 1억씩 빌려주세요, 투자하라고. 그리고 그 투자를 개인이 못 하게 하고 자산공사 만들어서, 우리 전세자금 그렇게 하잖아요. 전세자금 5억씩 대출해 줘요. 그리고 다른 데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성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세요.

○김종민 위원 마무리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옛날 재형저축 시대의 문제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자산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이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니, 부동산 자산 3억은 대출해 주면서 주식 재산, 건강한 자산에 대한 대출은 왜 안 해 줘니까?

주거도 한 10평대로 투룸으로 월 50만 원에 살 수 있는 역세권 주택, 청년주택 컨셉을 딱 확고하게 세워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지요.

애기가 긴데, 나중에 시간 날 때 얘기하고 하여간 일자리 정책을 중기부가 해야 된다, 제가 이것만 보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우리 장관님 되셔서 이것 안 하면 내가 끝날 때 또 좀 싫은 소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다음, 전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수 위원 후보자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상생배달앱, 공공배달앱 사업과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배달로 쿠폰만 지원한다고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던 소비자가 새로운 앱을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현행 지원방식의 한계를 지적하셨고 그리고 ‘현재 지원정책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높은 수수료로 인한 부담 그리고 할인쿠폰 중심의 지원만으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

신 부분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전은수 위원 저도 같은 문제의식인데 앞서서 오세희 위원님께서도 쿠폰 살포에 집중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고 저도 자료만 간단히 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보여 주십시오. 자료가 안 됩니까?

어쨌든 그래서 쿠폰이 신규 이용자를 유입하는 효과는 있는데 지원이 끝나면 다시 이탈되는 구조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밑 빠진 독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후보자님께서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내년도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에 전체 예산 1240억 원 가운데 1200억 원, 무려 96.8%가 소비자 할인쿠폰에 배정되었는데 임명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입점업체 확대와 신속배달 지원이 공공배달앱의 기본적인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혹시 추가 자료 준비됐나요? 자료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 공공배달앱의 한계와 민간배달앱의 성공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공공배달앱은 낮은 수수료 그리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배달 속도라든지 부족한 입점업체 그리고 민간배달앱보다 낮은 애플리케이션의 완성도·편의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배달앱이 입점업체뿐만 아니라 개발 역량의 격차도 현실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서 자료는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주요 민간 플랫폼의 개발인력이 2000명에 육박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공공배달앱이 소비쿠폰이라든지 입점업체만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규모의 개발인력과 자본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서비스 개선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공공배달앱이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경쟁할 것인지 낮은 수수료와 지역밀착형 서비스, 공공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분명히 정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 동의하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에 동의하고 지금 공공배달앱이 12개가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카운트를 하는데 지원하더라도 경쟁시키고 선별해서 지원해야 되고, 쿠폰도 그 앱 내에서 소비했을 때 5000원 쿠폰을 발급해 주는 방식은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무언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래서 신규 사용자가 유입되는 그런 예상 구조를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은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공공배달앱이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서 민간 플랫폼과 지속적으로 경쟁하려면 플랫폼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격차도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달앱의 힘이 단순히 이용자 수나 거래 규모에서만 나오지 않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주문, 결제, 이용 형태가 축적된 데이터가 핵심 경쟁력인데요.

지금 현재 마이데이터 개념,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중단권 등을 전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도 본인들의 데이터를 좀 확보해서 그런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공

공배달업을 확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좋은 의견이시고 그런 논의는 아직 정부 내에서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전은수 위원 이제 할인쿠폰만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밝힌 만큼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11월에 국회 예산심사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할인쿠폰으로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바꾸려고 하면 11월에 국회에서 그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만약에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10월 중에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은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질의를 주로 하다가 오늘 답변을 주로 하는데 힘들지요? 괜찮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굉장히 낯섭니다.

○김도읍 위원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자리니까 힘도 들고 낯설기도 하고 할 겁니다.

오전에 포괄임금제하고 주 52시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는 답변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후보자 지명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셨다고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김도읍 위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시던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노동 의제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랑 정년 연장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었고 노란봉투법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도읍 위원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정책간담회 할 때마다 노란봉투법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아마 시간이 짧아서……

○김도읍 위원 우리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워낙 강경하게 지지하는 쪽이라서 장관이 되시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좀 힘들어질까 봐 건의 안 한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제가 사실……

○김도읍 위원 2023년과 2025년, 후보자께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크게 도드라지는 발언들이 있어요. 그 입장들 지금도 견지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노란봉투법 내용 중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는 편입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요, 그 부분만 공감한다고 한 게 아니고 23년이든 25년이든 중소기업 관련해서 이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23년도에는 그 부분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고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25년도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재계에서 걱정을 하니까 ‘당신네들 걱정은 과장이다’, 노란봉투법 책임론에 대해서는 ‘억지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제가 딱히……

○김도읍 위원 각론으로 들어가지 말고, 각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그 입장 견지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누가 주장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런 식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때는 국가경쟁력이라든지 불법 파업…… 파업의 범위가, 노동쟁의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확대되니까 그것을 걱정했지요.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누가 주장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은 좀 과하다고……

○김도읍 위원 사용자성과 쟁의행위의 사유가 모호해지고 너무 확대되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게 과장이고 억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입장을 견지한다.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쟁의행위의 범위는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입장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제한돼야 되는데 입장만 내면 뭐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하위규정을 왜 개정합니까? 쟁의행위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을 규율하는 법인데 이게 법 하위에서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걸로 뒀니까, 법조인 입장에서? 그거는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걱정을 하고 하위법을 정비할 것 같으면 노란봉투법을 왜 밀어붙였어요? 지금 똑같잖아요. 검찰청 폐지해 놓고 부작용, 문제점 이제 보완할 테니까 국민의힘도 도와주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김도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물론 보장되어야 되지요.

그런 모호한 입장, 알겠습니다.

환노위 간사를 하셨다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근로기준법 104조의2, 신설 법안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104조의2가 뭘지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요.

○김도읍 위원 근로자 추정 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추정 제도.

○김도읍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근로자 추정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언급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너무 높고 그래서 근로기준법 바깥으로 자꾸 노동자들을 내모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로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호의 높이를 어느 정도 사회적인 타협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 104조의2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뭘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김도읍 위원 이게 근로자성을 추정하는 거예요. 근로자 추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아세요,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특고나 프리랜서까지 근로자 추정이 되게 되면 사실은 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부담이 여러모로 커질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특히 영세사업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갈 거예요.

법조인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입증책임의 일반론에 지극한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것을 본인들이 반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잖아요. 이것을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추정 제도하고 두 가지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 말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최소한의 기본적 보호를 담는 그런 법안에 대한 논의도 있고……

○김도읍 위원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나는 그 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취지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내가 볼 때는 그거와 관련된 재단 만드는 것, 재단에다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나는 주목적이라고 보여져요.

법안 상세하게 한번 뜯어보세요, 조문별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위원장 김성원 인사청문회 개의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자료 정리 등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5시 45분에 속개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번에 따라 보충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이소영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4년 9월에 저희 방인 김원이 의원실하고 중소기업중앙회하고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 하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적이 있는 중소 제조업체 500곳 중에서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겪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500곳 중에 102곳, 20.4%가 대기업과 제품 판매를 할 때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어요. 이 실태조사가 사실은 조사했던 게 24년이니까 13년 전인 2011년에 한 경험에서 조사한 이후로 처음이었더라고요. 그때 2011년에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조사한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23%였어요, 2011년에. 근데 13년이 지난 2024년에 23%와 거의 비슷한 20.4%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3년이 지났는데 거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한 2% 정도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태조사 내용 중에 불공정행위 세부 유형으로 가장 많이 답한 게 납품단가 후려치기, 그러니까 약 70곳으로 68.6%였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 감액을 경험했다고 한 70곳 정도, 68.6%가 대답을 했고.

그러면 이런 불공정행위에, 즉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어떻게 대처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무대응했다’, ‘그냥 수용했다’라고 답한 곳이 57곳으로 55.9%였습니다. 이들이 그냥 문제가 해결돼서 수용하거나 그냥 접은 게 아니라 부당함을 느꼈지만 추가 피해를 우려해서 덮은 거지요. 이런 게 여전히 2024년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 체결을 할 경우에 상대 측에 대하여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의 요청을 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제가 냈는데 1년 7개월이 지났어요. 1년 7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냥 묵혀 있습니다.

장관님,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의견 좀 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일단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그런 가맹점주들이 본부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범위에서 이런 협의권, 협상권을 인정할 때 몇 가지 고민해야 될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게 담합행위의 예외로 공정위가……

○**김원이 위원** 인정해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인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범위가 명확해서 그 협상의 상대방과 또 그 소속되어 있는 가맹점주가 명확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외의 범위에서 단체 집단협상을 했을 때 그 협상의 결과가 이 집단 안에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그 바깥의 유사 사업자에게도 어떤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저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이 위원** 사실은 이게 중기벤처부하고는 사전협의를 충분히 이루어져서 동의가 됐던 거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설득하는 과정이었는데, 사실은 설득하다가 지금 장관님이 총리로 가시는 바람에 이게 또 스톱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관 되시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충분히 설득해서 이거를 속도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만 동의하면 이거는 속도를 못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거는 좀 더 속도 있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설과 추석 때 명절을 앞두고, 지금 곧 추석이니깐요, 다다음 주면 추석인데 농림부하고 해수부가 전국에 전통시장을 지정해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하시는 거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중소벤처부하고는 다르게 농림부하고 해수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중복으로 열리는 전통시장이 2023년에는 서른다섯 곳, 24년에는 스물다섯 곳으로 줄었다가……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1분 더 드릴게요.

○**김원이 위원** 25년에는 마흔한 곳으로 다시 늘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거를 혜택을 못 보는 전통시장에게도 충분히 같이할 수 있는데 중복으로 보는 곳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조정을 하면 더 많은 전통시장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환급 행사가 하루이틀이면 끝나 버리는 거 아시지요, 인기가 좋아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김원이 위원** 그러면 다른 혜택을 안 보는 곳으로 넓히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소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전통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또 중기부는 중기부대로 따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중기벤처부가, 전통시장을 관할하고 있는 부서가 중기벤처부니까 관할이 돼서 이거를 좀 더 많은 전통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그 부분 저도 관심이 있어서, 저희 집 근처의 전통시장에서도 명절 때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 줄을 몇 시간씩 서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알아본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농림부와 해수부 그리고 중기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여러 번 했고 중복 지원 문제는 그 중복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하기로 협의가 됐다고 들었었고요.

줄 서는 문제를 그렇게 지류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하는 부분은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번에 잘 되지 않아서 이번 추석 때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 문제는 저도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중복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더 많은 전통시장이 충분히 혜택 볼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후보자님, 소비쿠폰 관련해서 김원이 위원이 질의를 해서 저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복되고 줄도 오래 기다리고 있고 또 그걸 상인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간단하게 채용하는 사람, 아르바이트 해 놓으니까 몇 시간씩 서서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특히 환급·결제 과정에서 원스톱으로 하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번 추석 때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제가 주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1년에 100만 개가 창업을 하고 80만 개 정도 문을 닫습니다.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100만 개 가까이 폐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물론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워야 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1인 상인, 1인 영세상인 이야기입니다, 골목상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건 판매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외식업, 식당이나 숙박업이나 전부 다 지금 생태계 다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대로 방치만 할 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은 취업이라도 하지만 지역에서는 겨우 겨우 중소기업 다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자영업으로 빠지게 되면 이걸 결국에 한 1억 정도 빌려 가지고, 자기자본이 평균 5000만 원,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000만 원 대출받아서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것 5년 내에 70% 문 닫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막막해집니다, 막막해져. 이걸 중기부에서, 지금 소진공에서도 이걸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이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백년기업이 지금 4만 5000개, 우리나라 19개라고 합니다. 왜 이런 습니까? 일본의 장인정신, 가업승계, 이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오래도록 영업의 존속기간이 길어지는데 우리는 왜 5년 내에 거의 80%가…… 사실은 숙박업이나 음식점 점 하면 35% 하는 것도 이것도 더 낮습니다.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5년 이내에 다 망하고 문 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장관님,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창업지원센터나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케어를 해 주고 지도를 해서 창업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우리나라가 창업이 너무 쉽다는 지적이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는 교육 이수를 몇 시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턱이 있는 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본은 보통 중소기업도 30년, 우리나라는 6년, 7년 이런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창업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오래도록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걸 국가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지역마다 창업지원센터 다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지역마다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전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래서 이걸 아예 창업을 할 때부터 좀 더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구체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장조사로 예상 매출도 계산해 주고 원가, 임차료, 대출 원금, 생활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우리는 손 놓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오래도록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아예 내팽개쳐 놓고 국민들이 그냥, 특히 어려운 서민들이 그냥 살 길이 없으니까 빚내 가지고 조그마한 가게 차렸는데 그것 망하고 나면 그 뒤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냥 삶이 다 깨집니다. 그걸 미리 국가에서 케어해 줘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골목상권 완전 붕괴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박성민 위원 정부에서 그것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소진공도 그것 터치를 안 하고 있어. 중기부밖에 없습니다, 말할 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창업을 더 내실 있게 해서……

○박성민 위원 꼭 챙겨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실패를 줄이자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성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제가 아까 전에 규제개혁부장관 되겠다고 말씀하신 후보자님 발언 관련해서 규제개혁 철학이나 다른 부처도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과연 그 부분이 어떤 의미를 지닐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좀 제기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도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후보자님께서 여전히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계시다고 볼 수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들, 사실 NDC나 여러 가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활동들은 규제 완화를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활동들이 더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차규근 위원 그래서 위낙 후보자님께서 왕성하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그런 것을 보고 상당히 일 욕심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불필

요한 규제는 완화하겠다 그런 의지는 저는 이해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자칫 다른 것도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까지 그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이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규제가 대기업,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자칫 규제개혁부장관이 되겠다는 포부가 시장의 일반 국민들에게 그 메시지가 잘못 전달될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차규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섬세하게 계속 유지해야 될 규제 그리고 어쩌면 더 강화해야 될 규제가 될지 또 규제개혁을 해야 될 규제는 뭔지를 장관님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신다면 그 위치에서 정교하게 섬세하게 접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그리고 규제개혁이 대기업에게만 자칫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규제 합리화는 가령 2015년인가요, 사실 카페의 테라스 영업이나 루프톱 영업이 그 전까지는 금지되는 대상이었습니다. 네일숍 개업을 할 때도 미용사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불법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규제가 개선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루프톱 영업, 테라스 영업, 네일숍 개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영역도 있었습니다.

○차규근 위원 예, 그것 정교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그러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지금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서면질의에서도 후보자님께서도 소상공인 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중간 역할을 하겠다, 원론적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관점에서 하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니까 온라인 소비가,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는 오프라인 소비와 비교해서 4.8배 많은 포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요. 온라인 쇼핑이 성장할수록 전체 쓰레기 배출량이 10%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분별한 포장 쓰레기 막으려면 배송 플랫폼과 유통기업에 포장 폐기물 탄소 배출 감축 책임을 지우는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마트에 갈 때 그런 운동이 있었지요, 에코백 들고 가기. 그것으로 우리가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요즘은 온라인 배송, 새벽배송 하면서 보냉제 그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선제품 보관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올 4월 달에, 상생안이 나온 택배 과대포장 규정을 올 4월에야 계도기간 끝나고 본격 시행을 했는데 정작 새벽배송의 핵심인 보냉제는 규제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차규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냉제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이런 부분은 규제 완

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를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평소 기후위거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후보자님도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저도 진입규제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이고 사실 도로의 신호등까지 없애자는 과격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관련된 규제들은 꼭 필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걸 강화하는 게 제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진입규제 완화하고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포장재 문제는 어떤 기사를 봤더니 올리브영에서는 종이백으로 화장품 하나를 배송하고 똑같은 걸 쿠광으로 주문하면 5배의 폐기물이 나온다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폐기물을 양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규근 위원 그래서 아이스팩, 보냉재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좀 검토해서 정책을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향엽 위원 후보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아닙니다.

○권향엽 위원 우리가 지난 8월 20일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권향엽 위원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라 소셜벤처라든가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이 아주 중요한 경제주체인데 이 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11월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맞습니다.

○권향엽 위원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권향엽 위원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것들은 타 부처가 담당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원래 소셜벤처가 중기부의 담당이었는데 이번에 생협이 중기부 소관으로 넘어오게 됐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까지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또 이번 내년도 정부안에 예산안은 담기지 않아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상의 구체적인 정책까지는 아직 깊이 고민하지는 못했습니다.

○권향엽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는 돌봄 영역에 있어서 협동조합들이 의료생협도 있고 먹거리생협도 있고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관심 가지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리고 아마 후보님께서도 지역구 다니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으리라 보고요. 방금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외식업이라든가 식당 등 골목상권 경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역구 활동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지역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5일장이나 산지에서 식자재라든가 야채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고 사서 쓰는데 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원자재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건 세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간이세금영수증 같은 것들을 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경부하고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자도 그리고 외식업이나 자영업자들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농산물 생산자가 영수증을 발행하게 하면 그걸로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향엽 위원 그런데 실제로 생산자도 현재 시장에서는 5일장이나 골목상권 같은 데서 야채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양도 굉장히 많아요. 매매되고 있는 그 양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전혀 없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 부분은 제가 깊이 고민해 보지 못했는데……

○권향엽 위원 좀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자세히 알아보고……

○권향엽 위원 작년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방안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6월 29일 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대도약 성장프로젝트가 사실은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장관님께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보다 구체화되고 또 명시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함께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일들을 추진하다가 보면 오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각 부처 간에 서로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권향엽 위원 그래서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국무위원으로서, 예를 들면 오늘 52시간 문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서로 상충되었을 때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저는 국회에서 활동할 때도 당내에서도 제가 좀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 공개적으로 토론하면서 접점을 찾아 간 여러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또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 있는지 토론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논쟁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역할을 해 보고 싶습니다.

○권향엽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이야기를 조금 하셔서, 사실 제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최초 발의자 중의 하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알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21대 국회 때 제가 환노위를 하면서 처음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정말 수개월 이상 전문가들 그리고 각계와 소통을 해서 연구해서 만들었던 제정법이었고, 물론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사실 무슨 단체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이권 챙겨 주려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우리의 노동시장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플랫폼노동, 새로운 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 새로운 어떤 자영업이나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더 이상 우리 보호 법제에 포섭되지 않게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하에 했던, 만들었던, 연구했던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노동계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 그냥 근로기준법을 확대하지 않고, 왜 5인 미만 사업장을 전부 다 확대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형태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드느냐라는 반발도 있었고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데 지금도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한 고민을 환노위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부도 같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무슨 근로자추정제도 이야기도 나왔지만 사실 근로자추정제도가 얘기 나오는 맥락이 아까 1인 자영업자 얘기랑 비슷한 것 아마 후보자도 들어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짜 3.3 계약들, 실제로 1인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잘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다 노동자인 이런 어떤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추정제도 같은 것들도 지금 이야기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런 어떤 플랫폼노동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다양한 노동 형태가 이루어지고 그게 외견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1인 자영업자의 형태로 지금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그냥 노동부의 일이야’, ‘이것은 그냥 노동이니까 기후환경노동위에서 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이 형태의 경제활동을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의 시장 질서를 잡아 나가느냐가 저는 그냥 단순히 노동부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정말 수백만의 소상공인들과 수백만의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부가 그리고

후보자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더 넓은 시각으로 관심을 가지고 뭔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최근에 중기부가 예산안에도 반영했었지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고 소상공인들도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국민적인 권리를 우리가 예산안이나 다른 정책들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우리의 교훈들을 일반법의 형태로 아니면 다른 보호 법제의 형태로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사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나 관련 노동 법제가 경제계와 여러 갈등들이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대안을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 가능성들을 더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요즘에 하는 일과도 아주 맞닿아 있어서, 저희 메가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지역 간에나 아니면 산업 간에나 이런 여러 가지 일종의 불균형이 생겨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 산업 아니면 제도적인 어떤 불균형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가프로젝트를 범정부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수행할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앞으로의 확산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보편화·일반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스킴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고 확실하게 국민들께 알려 드리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일부 프로젝트하는 데서 끝난다, 이것 용인이나 광주 하는 데서 끝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여러 산업 분야에서 그리고 여러 기업의 규모에서 정말로 국가 보편적인 전환 프로젝트로 이것이 기능할 거고 확실한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부분을 나중에 장관 임명된 이후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제가 얼마 전까지 문제의식을 느꼈던 부분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부의 회의체에 있어서 산업부, 과기부, 기후에너지부, 국토부는 보이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저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균형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그 그림 안에 끼어들어 가려면 그 논의체, 그 의사결정 구조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함돼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의 질의 중에,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질의 중에 후보자 답변이 ‘과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위험성을 과도하게, 과학적 검증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제가 한 논평이나 발언 중에서는 근거가 없는 발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미해양연구소협회에서 낸 보도자료나 그런 논평을 인용한다거나 과학자들의 의견, 해외 과학자들의 의견을 인용한 논평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거는 의원님 하실 때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기준치 180배의 세습 우력이 살았던 오염수가 우리 바다로 흘러들어 온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지요? 저희들 여당일 때지요. 국민의힘에서 발언했던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후보자께서 좀 있으면 아니면 혹시라도 중기부장관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기부장관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7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을 닦아 줘야 되고 지켜 줘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맞습니다.

○**구자근 위원**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수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혹시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새로운 다른 사항들이, 사고와 사건이 발생했나라고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새로운……

○**구자근 위원**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횃집에 안 가나요? 민주당은 소고기 안 먹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자근 위원** 계속 더 설명하시면 후보자님이 덕 볼 게 없지 싶어요. 이 자리에서, 그때 상황은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장관후보자 입장에서는 우리 자영업자들 지켜 주셔야 하지 않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당연히……

○**구자근 위원** 그렇다고 지금 현장에 가서 뽀뽀하게 ‘내가 여러분의 장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믿고 먹어 주세요’ 그렇게 홍보하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거기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셔도 여러 해양, 해외 논문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IAEA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민주당 정부의, 최근 정부의 확인은 2026년 8월 21일 자네요. 브리핑 기준에 모두 적합하다고 나온 부분들입니다.

장관으로서 지금 봐서, 그 당시의 입장은 그렇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안전하게 드셔도 될 것 같다고 홍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이나 통제를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고, 그 사태의 어떤 과정 이후예요. 그리고 해양의 방사능 농도도 굉장히 여러 지점으로 넓혀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것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다 한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맞습니다.

○**구자근 위원** 맞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그런 문제 제기 때문에 강화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자근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자꾸 그런 식으로 비켜 가시면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분들이 불안해하신단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탈석탄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정부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구자근 위원 이제는 중기부장관이 되시면 그 방향성, 탈석탄으로 가야 되고 탄소·온실가스 줄여야 하고, 그 방향성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속도에 있어서 이제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가는, 정부가 가는 그 방향성 속에서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장관님이 하게 될 그 부처의 모든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탈석탄 하게 되면 발전소만 없어지고 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기관들, 거기에 여러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사업 전환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속도를 이야기하고 탈석탄을 주장하지만 그분들, 그 외의 분들의 어려운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사업 전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구자근 위원 아니, 그것은 산업부의 지금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5인 이상만 해당되지 5인 이하의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석탄 산업은, 이 산업 분야는 사업 전환 관련해서 중기부에 자료가 없더라고요, 자료요청을 해도 주지도 않고. 없는 겁니까? 그래서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제가 한번 연구를 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재보충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께서 계셔 가지고……

○김도읍 위원 아니, 신청받지 말고,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재보충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분 드리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제가 후쿠시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 보고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재량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었다고, 내신 것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제 법안을 읽어 드릴게요.

지금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또는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것도 참 웃기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 ‘방사성물질 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할 수 있다고 아마……

○최수진 위원 지금 이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 과학적 근거 분명히 나옵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IAEA 보고서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명분이 없을까 봐 이 법안을 내는 거다라고 취지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학적 근거 없이 공포심을 조장해서 과잉 입법이 아니었나. 그리고 실제로 5만 건 이상의 실험을 했을 때 제로가 나왔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을 냈을 때 반발이 너무 심했습니다. 진짜 식품안전처 같은 경우 이 얘기를 하지요. ‘해양에 방류한 경우 위해 여부와 상관없이’, 아까 말했지요. 그냥 하면 ‘위해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의견을 냈고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든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일본산 식품 수입 규모는 한 해 7조 원이다. 그러면 국내 식자재시장의 중요한 공급처고 결국 이것 금지하면 지금 식품업계나 외식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과 모든 사람이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저는 너무 다행입니다. 다행히 통과는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중기부장관후보의 입장에 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은 이랬으나 지금은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여러 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계속 말장난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었고 환경단체에서 했을 때보다 좀 더 이제는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들한테 가까이 가고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것 다 떠나서 이 부분이 제일 불안합니다. 이것을 맡길 수 있도록 저는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소상공인의 피눈물이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해내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 우재준……

○김도읍 위원 계속하자는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김성원 예?

○김도읍 위원 계속하자는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재준 위원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2022년에 일회용품 규제 확대 당시에 종이컵·플라스틱·빨대 이런 것들을 많이 확대했는데 당시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대체품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강제하려면 추가 인력 고용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2023년에 플라스틱·빨대 계도기간도 연장하고 종이컵도 사용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조치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후보자가 했던 이야기, 장관한테 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PPT를 한번 보여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는 이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영상으로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아주 격앙돼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 불편, 저는 중기부에서 나온 브리핑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환경부였어요’ 그러면서 ‘배신감과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일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환경부장관께서 자원 절약이나 폐기물 감축과 관련된 정책을 여러 차례 연달아서 유예하는 그런 조치를 발표해서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시 명심하셔야 된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재준 위원 환경부도 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도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 환경부도 충분히 생각해도 되고, 왜냐하면 중기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범부처적 성격을 가진 부처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 자체가 애초에 정책 수요자, 특히 약자인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범부처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메가프로젝트 이야기도 나왔지만 오늘 보면 노동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지금 한미 교섭이나, 통상교섭이나 관세 문제나 이런 것에서도 중소기업들이 다 뒤로 밀려 있는데 사실 저는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환율 문제 마찬가지로 공정거래 문제라든지 산재 문제라든지 거의 정말 많은 문제에서 아마 범부처적으로 중소·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넓게 보고 또한 가까이서 보고 하는 그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 주셔야 되는 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한번씩 이야기는 우리 동네 안경산업 이런 것도 사실 자세히 봐야 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또 그런 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중기벤처, 우리 소상공인들, 약자들 편에 서 주는 그런 국무위원이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제가 환경부장관후보자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두 가지의 역할은 소임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 명심해서 우려 없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소상공인 폐업에 대해서 준비된 창업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벤처기술 쪽으로 치우쳐 있고 자영업자 쪽은 사전 지원보다 사후 정책자금 대출 위주로 가고 있다. 이런 건 후보자 견해이신가요? 후보자 견해는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세희 위원 외국의 사례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거주지역에 6개월 이상 살아야 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자격증 소지를 해야 되고 이런 진입장벽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진입장벽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들어오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소상공인365에 많이 진입되어 있는 과밀업종 정보제공을 하고 있지만 정보제공이 아닌 지역별 상권 분석, 지역의 어떤 위험도, 그런 예보 시스템 구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입장벽을 조금 높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새벽배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왜 우리가 대형마트가 규제를 받아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쇼핑, 배민 비마트의 차이점, 오프라인 매장이 없다. 대형마트는 매장이 있다. 전국에 350개가 각 동네, 전통시장, 골목상권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형을 가겠지요. 새벽까지 밤새고 하면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가뜰이나 어려운데 붕괴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게 더욱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예측 가능한 데이터가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소비자가 얼마나 옮겨 가고 그 상권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지요. 그런 상태, 막연하게 유통산업발전법 2012년에 만들어 놓은 걸, 산업부 소관이지요. 그런데 중기부가 나서서 소상공인 관련이다 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약해서 1000억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1만 원 이상의 구매가 가능하게’…… 막연한 생각이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원을 왜 합니까? 그분들은 하루를 장사하고 영업이익이 나는 게 우선이지, 1000억이면 아시겠지만 1000억 갖고 전국을 얼마나 줄 거예요? 10만 원씩이요? 그렇게 막연한 간단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지요.

왜 이런 걸 풀어 가지고…… 대형마트 독점해라, 너네가 할 때 그냥 전국 매장에서 큰 매장 가지고, 전통시장 붙어 있지…… 그러면 당연히 매장으로 가겠지요. 그걸 새벽배송이라는 걸 규제를 그래도 해 놓은 겁니다. 너네 11시까지 하고 아침 10시에 해라.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우리가……

1분만 좀 주세요.

○위원장 김성원 드릴게요.

마무리하십시오.

○오세희 위원 우리가 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해야 되냐, 상권 보호를 해 줘야 되거든요. 골고루 가. 그래서 새벽만 해도 아침에 집 앞으로 오지 않고 시장으로 좀 나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켜져야 되고 골고루, 독점화 규제를 해서

어느 정도는 대형이 먹히지 않게, 독점화가 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하지만 이분들은 상생금을 주는 거 원치 않아요. 또 1만 원 이하의 판매를 한다? 아니, 요즘 양과 하나 해도 얼마인데 1만 원 이하예요? 이건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같이 함께 살자, 당신들만 살지 않고. 이런 거거든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규제든 상생 대책이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이나 상생안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맞는 말씀이어서 더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제가 저 유산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습시다만 오늘은 짧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저도 할 말 많은데 시간 때문에 지금 줄인 겁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조지연 위원님…… 아니, 윤한홍 위원서부터 하십시오.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이 저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어차피 추가질의 시간을 주시니까 아까 이소영 후보자에게 주질의 때 했던 거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기후솔루션에 많은 기부금을 내고 있는 해외펀드 처음 듣는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윤한홍 위원 그다음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 기후솔루션에서 취소소송을 낸 것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윤한홍 위원 지금도 그 입장 변함이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저 소송은 뉴스로도 제가 접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윤한홍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작년에 기후솔루션하고 후보자께서 같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후솔루션에서 온 주최자가 인사말에서 용인 국가산업단지 취소소송을 했다는 인사말을 했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기후솔루션을 후보자가 2016년에 김앤장에서 나오면서 그때 설립을 했고 2020년에 총선에 출마할 때까지 등기이사로서 부대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공동토론회를 최소한 열다섯 차례 이상 해요. 그리고 국정감사라든지 각종 법안 발의도 기후솔루션의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해외 환경재단에서 어마어마한 기부금이 증액이 되고 또 그런 과정을 다 거쳐 왔는데 모른다고 하니깐 제가 이거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확인은 안 되지만 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말씀 드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의정자료가 이소영 후보로부터 많이 전달이 됐어요. 이것도 모른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기후솔루션과 인슈어 아워 퓨처(Insure Our Future)라는 데서 홈페이지에 함께 기고한 영문과 한글로 된 기고자료를 보면, 이 제목은 뭐냐 하면 ‘폭로, 최후의 보루로 남은 석탄 보험사’ 이런 겁니다. 거기에 보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소영 한국 국회의원 조사를 통해서 지난 5년간 한전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개발과 운영에 보험을 제공한 보험사가 밝혀졌다, 이소영 의원실에서 제공한 문서를 바탕으로 또 이소영 한국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제공한 문서를 바탕으로 이 자료가 만들어졌다 하는 게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게 전부 이소영 국회의원실에서 나간 자료입니다. 자료를 받고 기후솔루션과 한 몸처럼 움직여 왔는데 이런 내용들을 모른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해외 환경재단도 모릅니까? 펀드를 모른다고 했는데 해외 환경재단도 모르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기후단체들에 후원을 제공하는 다양한 해외 재단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재단들 이름은 조금 생소하고, 위원님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 기후솔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느 정당에 편향되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당의 의원님들과 토론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 금융은 그 단체가 원해서 제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정책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사실 저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제가 2017년부터 해 왔던 활동이어서 그 일을 계속 일관성 있게 했던 것일 뿐입니다.

○윤한홍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예, 1분 드릴게요. 마무리하십시오.

○윤한홍 위원 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솔직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윤한홍 위원 그다음에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을 취소소송을 낸 것도 보면 LNG발전소를 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원자력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LNG발전소도 안 된다고 취소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후솔루션이 왜 이렇게 했었을까. 결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기후솔루션이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얻을 게 뭐냐?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저는 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각종 자료라든지 협력관계를 구축해 주신 분이 후보자님이신데 중기부장관이 되면 그런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중기부하고 환경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장관후보자가 아니고 중기부장관후보자라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윤한홍 위원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은 국회의원과 또 국무위원, 장관의 어떤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의 차이를 잘 아시고 유념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소영 후보자를 예결위 때 그리고 기후 특위 때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소신이 강한 정치인이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매 질의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 관련해서 당내 기구나 이런 모임이나 이런 데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소취소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게 당내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공소취소 모임을 해산하는 대신 당내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대표였던 분과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공동으로 부대표를 맡게끔 합의가 되었었는데 그때 그 당 특위에는 한 3주 정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공소취소, 그러면 국정조사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 역할은 공소취소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 특위의 이름은, 그러니까 원래 어떤 특정 사건이……

○조지연 위원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추진위원회인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조지연 위원 이 특위가 다루는 내용들이 대통령 관련 재판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여기에 국정조사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후보자의 소신입니까, 그러니까 공소취소를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동의해서, 그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동의해서 참여하신 것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논리적으로는 조작된 기소가 있다고 하면 형사소송법 기존 규정에 따라서 검사가, 기소기관이 공소취소를 하는 게 맞다고……

○조지연 위원 동의해서 참여하신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조작기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조지연 위원 아까 전에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기권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권을 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조지연 위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는 기소기관이 검찰이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고 특검은 임시조직이고 해산되고 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지연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해야 되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거는 제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조지연 위원 국무위원이 되시면 분명히 그 논의도, 직언도 하실 수 있는 위치인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런데 그거는 기소관청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으로.

○조지연 위원 그 내용을……

○위원장 김성원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십시오.

○조지연 위원 대통령께 국무위원으로서 정말 국무회의에 올라온다면 직언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개별 사건이라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제가 일관된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조지연 위원 국무위원이 되셨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판결은 법원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고……

○조지연 위원 왜냐, 국정조사추진위원회에는 부위원장으로 이름 올리시고 또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표명을 하시고,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이 의제가 논의될 때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소신을 피력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어떤 내용이 올라오는지를 가정하고 말씀을……

○조지연 위원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에 관한 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거에 대한 어떤 처분적 법률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걸 법률로 만드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지연 위원 회피하지 마시고요. 찬성이나 반대냐를 오엑스로 얘기해 주시면 정말 정확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거는 오엑스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가령 조작기소가 된, 정말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했다라는 증거가 어딘가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검찰이 공소취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법에 그 권한이 담기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닌 임시 기관에 그 권한을 주는 것이 자칫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임시 조직을 만들어서 기소를 취소하는 이런 자의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수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메가프로젝트에서, 저도 사실은 메가프로젝트 내용을 보고 중소기업을 더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태계 지원을 육성하고 하는 부분에서 더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후보자님께서도 메가프로젝트에 중기부가 빠져 있더라, 적극 들어가야 되겠다라 그런 입장이라고 해서 너무 반갑고 임명이 되시면 좀 적극적으로 메가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업도시 관련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중기부가 지난 8월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창업도시는 대표도시와 협력도시로 구성됩니다. 중기부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대표도시를 권역 내 창업도시로 간주하며 대표도시 내에 창업 지원 기능이 집중될 중심 구역을 한 곳 이상 지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대표도시 한 곳 지정한다고 해서 중기부에 물어보니까 원칙적으로 기초지자체 한 곳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기준 알고 계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은수 위원 이 창업도시의 조성 목적은 기재된 대로 광역 단위 창업 생태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기부 기준대로라면 광역 단위가 아니라 기초 단위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됩니다. 또 하나는 협력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협력도시는 또 창업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협력도시로 지정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대표도시가 중요하지라는 우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창업도시의 기준을 기초지자체 한 곳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한 광역 내에 대표도시를 기초단체 두 곳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협력도시도 창업도시로 간주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게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방균형성장 기조와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초도시 한 곳으로만 대표도시 선정하는 경우에 신경 쓰고 계시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효율성 저하도 우려되는데요. 예를 들어 A 도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등 산업 기반이 들어서 있는데 B 도시는 창업센터 등 소프트웨어가 집적돼 있습니다. 이 두 도시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한 도시가 대표도시, 나머지 도시가 협력도시라면 굉장히 기초지자체에서 좀 동력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기초지자체가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권이 완전히 겹치는 그런 지역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바로 옆에 있는 인접 지역하고 완전히 지하철역도 같이 쓰고 생활권이 겹치는데요.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공동 거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어떤 행정 구역을 단위로 해서 꼭 한 곳이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규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이번에는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코스닥 ETF 좀 보유하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차규근 위원 그런데 후보자께서 아까 오전 중 답변에서도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셨는데 코스닥의 중소벤처기업 829만 개 중에 천육백 곳 남짓만 들어가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사실 코스닥은 아주 지금 과거에 비해서 별로 오르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불필요한 오해가 좀 생길 수 있는 건 아닌지, 후보자 본인께서 코스닥 ETF를 가지고 계시는 상황에서 만약에 코스닥 상장 폐지의 어떤 요건 속도를 늦추고 또 코스닥으로 자금이 돌게 하는 정책을 펼치면 ETF 가격이 결과적으로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납품단가나 기술탈취나 하도급처럼 상장사, 비상장 협력사 이해가 갈리는 사안에서 장관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기운다면 그것도 ETF 가격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물론 개별 종목이 아니니 괜찮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백지신탁의 의사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이게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코스피 5000정책을 하면서 코스피 ETF에 그때 1억 원을 투자하는 일을 했던 것도 이해충돌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2014년 11월부터 한 달에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절반은 코스피 ETF, 절반은 코스닥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 ETF는 코스피에 비해 수익률이 정말 낮습니다. 이게 금전적으로 더 이익이 되지는 않는데 다만 코스닥에도 더 애정을 가지고 코스닥이 더 잘되는 데에 있어서 저도 기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의 순수한 의지는 저도 공감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은 그런 의구심도 들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보시기를 바라구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또 배우자께서 대기업 변호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김앤장 소속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차규근 위원 후보자께서 전에도 타다 관련해서도 입장을 많이 밝히신 바도 있는데……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원 예, 더 드리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과거 타다의 형사사건도 보면 김앤장에서 대리를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검사 하시다가 김앤장에 가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서면질의했을 때 배우자가 관련되는 이런 게 있으면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니까 신고, 회피 신청을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관련 법에 의하면 자신이나 그 배우자,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도 사적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로 김앤장이 대기업 위주로 많은 자문·변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김앤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배우자가 계시다 보니 대기업과는 좀 상반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나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 후보자님의 이 업무 영역과는 뭔가 이해충돌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의 시선을 또 국민들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일단 첫 번째는 가족이 어떤 민간에서 일하거나 또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런 이해충돌의 상황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인으로서 더 철저한 분별력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번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각 부처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되어 있고 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자문을 구했을 때 어떤 어떤 유형의 일을 회피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도 그 담당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사건을 가족들이 회피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한 치도 오해를 받는 일이 없게끔 분별력 있게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예, 공정하게 업무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후보자님, 방금 전에 차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배우자께서 대형 로펌에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좀 더 엄격하게 그렇게 행동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윤한홍 위원님께서 후보자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과거 대변인으로서 활동하셨을 때의 그 입장과 현재의 입장에 대해서 즉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제가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중기벤처부장관후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소상공인들이 후보자께서 어떤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저는 괴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당시에 지금까지 했던 민주당의 입장들에 대해서요, 본인의 행위도 그렇고. ‘앞으로 30년간 방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누적되었을 때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는 제가 볼 때는 수산업계와 수많은 어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앞으로 30년간 어떤 일이 벌어

질지 모른다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속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서지영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5년간 집행된 예산이 2조 8000억, 거의 3조에 달합니다. 5년간요. 3조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15만 건을 검수했지만 문제가 되었던 부적합 기준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주 가열찬 선동과 괴담의 결과, 그로 인해서 이만큼 예산이 투입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기준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30조를 투입해서 이러한 조사를 계속해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다고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생각대로 하면 3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게 후보자의 생각입니다.

저는 수많은 수산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지금 후보자의 메시지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명절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장관의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이러한 선전과 선동에 대해서 후보자답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올해 1월쯤이었나요, 다카이치 사나에 수상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수산물 규제 철폐, 수입 철폐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1분 더 드리십시오.

○서지영 위원 과연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한일 간의 수산물 금지 철폐, 금지 해제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 갈 때 후보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입장을 표명하실지 아주 궁금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30년 뒤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지금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저는 우선 지금까지 이렇게 수십만 건의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적합 기준이 없었다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시고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2조 8000억, 앞으로 후보자 생각대로 하면 30조가 투입되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수산업 종사자와 수많은 소상공인과 수많은 벤처 창업자들에게 투자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입장 밝혀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아마 찾아보시면 저는 한 번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수년 안에 한국 해역에, 예컨대 그때 ‘8개월 안에’, ‘9개월 안에’ 이런 주장 하는 기사들도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게 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그런 메시지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한국 해역이 위험하다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검역을 하고 있는데 한 건도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 과학적으로 또 국민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지영 위원 후보자께서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 하고 계신 겁니다. 30년 뒤에 여전히 어떤 일이 모른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심각하고, 15만 건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증 결과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고 여전히 과담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후보자는 지금도 선전·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죄송합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저의 논평과 관련된 비슷한 내용의 논평의 맥락은……

○서지영 위원 논평이 아니라 후보자는 지금도 과담이 아니라고 아까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제가 낸 논평에 대해서 제가 과담이라고 생각하면……

○서지영 위원 30년 뒤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군요, 후보자의 생각대로라면.

저는 지금도 후보자께서 선전·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과연 추석 때 수산물시장에 후보자가 가서 뭐라고 하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지금 우리 해역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

○서지영 위원 3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서요.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지막에 장철민 위원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본인이 이야기를 했든 안 했든 그걸 떠나서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민주당의 그러한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과담이 아니라, 그리고 3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르지 않느냐,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김도읍 위원 그것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듣는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의 중소기업부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될 사람이 30년 뒤에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러면 수산업계 어떻게 될까?’…… 상당히 무책임한 이야기지요, 과담이다 아니냐를 떠나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던 변호사들이 지금 대거 국회에 들어와 있지요? 동료로 들어와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김도읍 위원 그분들이 조작기소의 단서를 뭐라고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단서요?

○김도읍 위원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단서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집권 여당, 공당이 해야 될 일인지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집권 여당 구성원들이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주체들, 구성원들이 이재명 사건에서 변론을 했어요. 그때 왜 주장 안 했을까요, 조작기소라고? 그러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국민을 선동하고 있어요.

더더욱 가관인 게 조작기소라면서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에다가 조작기소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 조사기구를 만들어요. 아니, 조작기소라면서요? 그렇게 주장해 놓고 조작기소인지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 공당에서 공소취소 국정조사추진위원회 부위원장 하셨다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체면이 있고 권위가 있으면, 조작기소라면 ‘내 재판 빨리 재개해라.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내가 조작기소를 주장하마’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재판은 어떤 형태로든 중단시켜 놓고 정치행위로 여기 특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하면서……

○위원장 김성원 1분 더 드리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부위원장을 하면서 조지연 위원 질의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조작기소라면 조사를 해서 검사가 공소취소해야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도읍 위원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존중해야지요. 기소가 되었고, 내 재판 재개해서 조작기소를 주장하고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으면 되지요. 왜 이래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한 주장이라고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도읍 위원 민주당과 그 주변이 조작기소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작기소인지를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앞뒤가 맞고 당연한 논리예요?

이소영 후보자도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상당히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다. 이게 당연한 논리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않은 논리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원론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에 대한 규정도 있고 공소취소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후보자님, 일련의 과정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집중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궤변이에요, 그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아까 드린 말씀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우리가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여기 법사위예요? 특정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몰라요?

.....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인가요?

○위원장 김성원 예.

○장철민 위원 후쿠시마 건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후보자에게 그래도 조금 해명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후쿠시마 건에 대한 공방이 왜 지금 수산업계나 소상공인들한테 위협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솔직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냥 몇 가지 사실관계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지금 후쿠시마나 주변 지역 8개 현인가요? 수산물 금지 조치가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오래전부터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앞으로도 이어질 거고, 그래서 저는 혹시나 국민들 또 누군가가 불안해하신다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큰 변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조금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기 영향에 대한 것은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IAEA도 그래서 앞으로 최소 30년 이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추적이나 조사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하겠다고 사실은 하고 있고 일본에 아예 연구소하고 현장사무소까지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대규모 오염수 방류를 희석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구적으로 단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걱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IAEA나 일본 정부나 우리나라나 아니면 태평양 다른 국가들이나 모든 글로벌한 국가들이 함께 감시하고 추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전 지구적인 인류의 건강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챙겨 나가자 하는 공감대 안에서 지금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후보자가 얘기하신 장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게 국제적인 공감대하고 완전히 결이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답변이었는데 이게 왜 우리 수산업계나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될 거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후보자도 방금,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예, 맞습니다. IAEA도 30년간 과학자를 배치해서 추적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혹시나 우리 국민들께서 후쿠시마 수산물이 갑자기 수입이 재개되거나 이런 오해를 지금 이 논박 과정에서 잘못 들으셔서, 오히려 지금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 벗어난 논의들이 괜히 사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우리 국민들의

불필요한 걱정거리를 만드는 일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조금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10초 동안 혹시 하실 얘기 더 있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아닙니다.

○장철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후보자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후보자로서 중기부 산하기관들 한번 다 면담을 하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아니요, 산하기관 면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아직은 안 한 상황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인사가 만사이지만 인사가 망사일 수도 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중소기업부장관으로서의 인사에 있어 가지고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정말 엄청나게 중소기업인들을 살릴 수 있는 인재로 꼭 인사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누군지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소진공 이사장님은 인태연 이사장님입니다.

○위원장 김성원 뭐 하시던 분인지는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데 지금 자료에 써져 있는 걸 보니까 중소기업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님이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그리고 김어준 처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아.....

○위원장 김성원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렇게 질문들을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 얘기는 그겁니다. 2021년도에, 23년도였나요? 21년도에 엄청난 그런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산업계의 타격이 엄청 났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또 당의 대변인으로서 그렇게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국무위원으로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수산업계의 소상공인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짧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질문을 한 건데 그 당시에 그것은 완전히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글썄요, 국무위원후보자로서의 답변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말씀을,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무위원후보자로서의 생각과 어떤 철학, 소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온 나라가 공소취소 관련해 가지고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과연 국무위원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냐. 원론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공소취소하는 그런 목적이 뭐니까? 결국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공소취소를 한다 이거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그런 오해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해야지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결국 논의의 중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논점이 흐려져서는 안 돼요. 그랬을 때 이러한 공소취소에 대해서, 현행 논의되고 있는 공소취소에 대해서 국무위원후보자로서의 그런 입장 또 소신을 듣고 싶다는 게 오늘 청문회의 질의에 대한 요점 아닌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인사 문제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다음에 공소취소 문제, 이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첫 번째,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의견을 낼 일이 있다면 실제 현업에서의 전문가분들이 그런 기관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저도 그렇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원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임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그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저만 옳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비쳐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지적을 받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당시에 나름대로는 과도한 주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가 그런 강한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 걱정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도 다시 깊이 생각해 보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발언에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형사소송법상 있는 공소취소나 공소기각과 관련해서는 준사법기관인 그러니까 기소기관인 검찰이나 또 사법기관인 법원이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다른 기관에서, 가령 국회에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실 때 충분히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런 기관들의 판단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종민·박성민·서지영·송재봉·우재준·이언주·정진욱·구자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공직후보자 및 소관기관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의 개의 전까지 모든 의원실과 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후보자에게 마무리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이소영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긴 시간에 걸쳐서 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혹시 미진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저로서도 제 자신을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이해하게 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은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또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데에 제 모든 열정과 노력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항상 먼저 현장을 생각하고 또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성원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오늘의 이 시간을 후보자께서 영원히 잊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중소기업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이소영 후보자가 중소기업부장관으로서의 국정 수행 능력 그리고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다각적인 질의와 검증이 있었습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 국무위원후보자의 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또 보좌진 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대응으로 수고하신 이소영 후보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위원회와 국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청문경과보고서의 작성과 채택 여부 등 인사청문회 관련된 향후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구자근 권향엽 김도읍 김성원 김원이 김종민 박성민 박희승 백혜련 서지영
송재봉 오세희 우재준 윤한홍 이연주 임문영 장철민 전은수 정진욱 조지연
차규근 최수진 허성무

○청가 위원(1인)

김승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박병섭

○출석 공직후보자

이소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차관 문신학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자원산업정책관 김종철

중소벤처기업부

감사담당관 김성훈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창업정책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임시회의록